

제 305 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22. 2. 14.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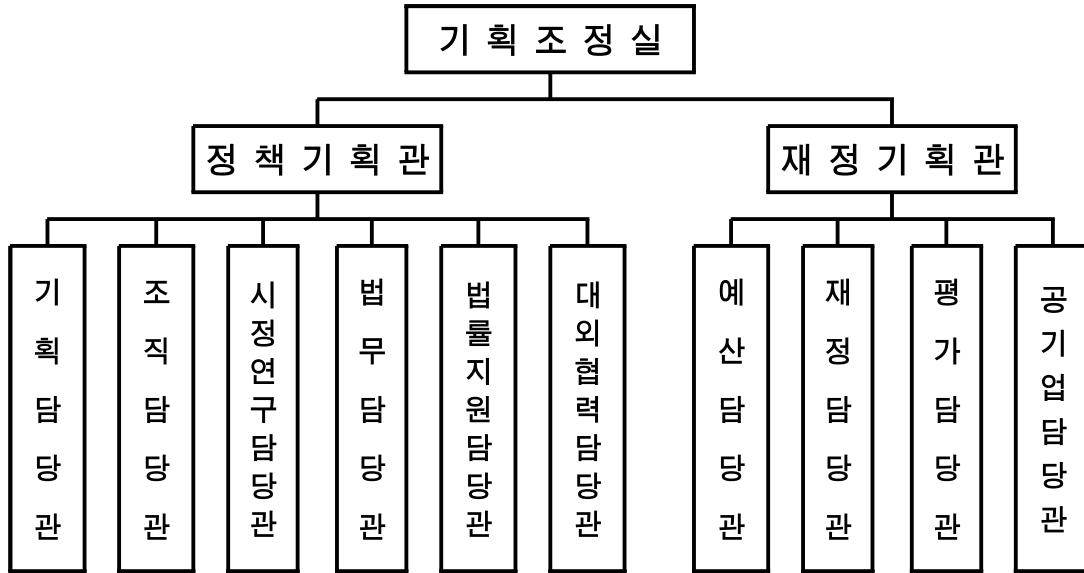
주요 업무 보고

2022. 2.

기획조정실

I. 일반 현황

조 직 1실, 2관, 10담당관, 45팀, 1직속기관 · 1출연기관



- 직속기관 : 시립대학교(6처 8대학 10대학원)
- 출연기관 : 서울연구원(1본부 8실 2센터)

인 력 271명/251명(정원/현원)

(’22. 1. 31.)

구 분	합 계	일반직	임기제	관리운영직
계	271 / 248 (153)	230 / 219	32 / 23	9 / 6
기 획 담 당 관	37 / 34 (15)	29 / 29	6 / 4	2 / 1
조 직 담 당 관	32 / 30 (19)	31 / 29	- / -	1 / 1
시정연구담당관	14 / 14 (9)	14 / 13	- / 1	- / -
법 무 담 당 관	26 / 24 (17)	22 / 20	3 / 3	1 / 1
법률지원담당관	30 / 25 (18)	12 / 11	18 / 13	- / 1
대외협력담당관	17 / 16 (8)	14 / 15	- / -	3 / 1
예 산 담 당 관	40 / 37 (22)	38 / 35	1 / 1	1 / 1
재 정 담 당 관	21 / 22 (15)	20 / 21	1 / 1	- / -
평 가 담 당 관	33 / 28 (17)	31 / 28	1 / -	1 / -
공 기 업 담 당 관	21 / 18 (13)	19 / 18	2 / -	- / -

※ 괄호 안은 여성공무원수

주요기능

구 분	담 당 업 무
기 획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업무계획 수립, 시정 현안사항 기획·조정 ○ 시의회 관련 업무, 국정감사 수감 총괄, 공약 총괄 관리 등 ○ 코로나19 서울시 종합대응 총괄
조 직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및 정원관리 ○ 민간위탁, 지방분권 업무 ○ 사무이양·위임, 사무위임전결 관련 사항
시정연구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연구, 직무발명, 도시경쟁력 평가 사항 ○ 시립대학교 운영의 지도·지원
법 무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정비, 납세자 보호업무 ○ 자치법규 입안심사 및 정비,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운영
법률지원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소송 수행, 법률자문, 계약서 및 위·수탁 협약서 심사 ○ 서울시 마을변호사 제도 및 이웃분쟁조정센터 등 운영
대외협력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지역 상생발전 추진, 타 지자체와의 교류 협력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회·지자체 등 협력 관련 업무 등
예 산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총괄, 예산집행 관리 총괄 ○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승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 코로나19 관련 시책 자원 마련 등
재 정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市·산하기관 통합재정관리, 기금운용 총괄 ○ 재정투자심사, 지방보조금·국고보조금 총괄 등
평 가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 주요사업·시책 성과평가 및 조정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 주요 시책 공정관리 등
공 기 업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출연기관 설립·지원, 경영평가, 재정 모니터링 ○ 투자·출연기관 경영혁신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등

예산 총 규모 : 2조 6,368억원

○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기준일: '22.1.31.)

구분	2021년 본예산(사업수)	2022년(사업수)	증감
합계	1,455,036 (51)	2,636,791 (47)	1,181,755
일반회계	563,318 (42)	635,079 (38)	71,761
특별회계	170,628 (-)	243,279 (-)	72,651
기금	721,090 (9)	1,758,433 (9)	1,037,343

○ 일반회계 : 총 6,351억원 (단위: 백만원 / 기준일: '22.1.31.)

구분	2021년 본예산(사업수)	2022년(사업수)	증감
합계	563,318 (42)	635,079 (38)	71,761
기획담당관	1,047 (2)	1,152 (2)	105
조직담당관	101,929 (12)	1,265 (3)	-100,664
시정연구담당관	- (-)	112,055 (8)	112,055
법무담당관	1,050 (3)	697 (3)	-353
법률지원담당관	7,596 (2)	7,766 (2)	170
대외협력담당관	1,721 (3)	1,644 (3)	-77
예산담당관	254,669 (3)	289,322 (3)	34,653
재정담당관	192,062 (9)	218,252 (6)	26,190
평가담당관	2,206 (4)	2,131 (4)	-75
공기업담당관	1,038 (4)	795 (4)	-243

○ 특별회계 : 총 2,433억원 (단위: 백만원 / 기준일: '22.1.31.)

구분	2021년 본예산(사업수)	2022년(사업수)	증감
예산담당관	170,628 (-)	243,279 (-)	72,651

○ 기금 : 총 1조 7,584억원 (단위: 백만원 / 기준일: '22.1.31.)

구분	2021년 본예산(사업수)	2022년(사업수)	증감
합계	721,090 (9)	1,758,433 (9)	1,037,343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552,254 (-)	1,242,755 (-)	690,501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164,575 (-)	511,541 (-)	346,966
대외협력기금(국내계정)	4,261 (9)	4,137 (9)	-124

※ 사업수는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 등 제외

Ⅱ. 정 책 목 표

시민의 삶을 회복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

체계적 정책조정 및 시정성과 창출 기반조성

① 시정성과 지원 및 미래발전 전략 수립

② 시민권의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

③ 실효성 있는 예산·재정 관리체계 확립

④ 시정신뢰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및 대외협력

· 기획조정실 주요 업무 보고

1. 시정성과 지원 및 미래 발전전략 수립

- ① 서울특별시 코로나19 대응 현황
- ② 현안 조정 역할 강화로 안정적 시정 운영
- ③ 시정 연구기능 통합운영·관리체계 마련
- ④ 주요 정책 지원을 위한 학술용역 체계적 관리
- ⑤ 인구변화 대응체계 및 중장기 로드맵 마련

2.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

- 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법률지원 대응 강화
- ② 민생회복 및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
- ③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한 시민권익 구제 강화
- ④ 무료법률 상담 개선을 통한 시민 법률복지 강화
- ⑤ 투자출연기관 규정 정비 등 경영효율화 추진

3. 실효성 있는 예산·재정 관리체계 확립

- ① 주요 재정사업 신속집행을 통한 민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
- ②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 정비
- ③ 지방채 적정 발행 및 운용으로 재정건전성 관리

4. 시정 신뢰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및 대외협력

- ①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수검 및 실적관리
- ② 민간위탁 효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③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④ 지역 교육격차 해소 지원 추진

1. 시정성과 지원 및 미래 발전전략 수립

① 서울특별시 코로나19 대응 현황

② 현안 조정 역할 강화로 안정적 시정 운영

③ 시정 연구기능 통합운영 · 관리체계 마련

④ 주요 정책 지원을 위한 학술용역 체계적 관리

⑤ 인구변화 대응체계 및 중장기 전략 마련

1

서울특별시 코로나19 대응 현황 (2.4. 0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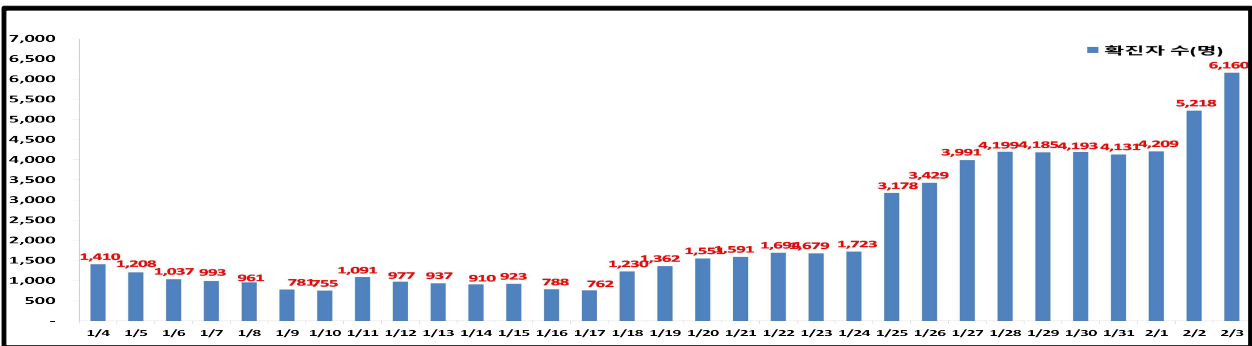
전 세계에서 대유행(Pandemic) 중인 코로나19에 대한 서울 내 확산 방지 및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서울시의 총력 대응 현황 보고

1. 코로나19 발생현황

○ (총괄현황) '20.1월 최초 발생 이후 서울시 297,043명 확진, 사망 2,194명

구 분	'21.12월말			'22.1월말			'22.2월(2.4.기준)		
	확진자	사망 (사망률)	전월대비 확진자 증가	확진자	사망 (사망률)	전월대비 확진자 증가	확진자	사망 (사망률)	전월대비 확진자 증가
전 국	182,897명	1,967명 (1.08%)	96,932명	228,801명	1,147명 (0.5%)	45,904명	70,619명	64명 (0.09%)	-158,182명
서울시	70,184명	700명 (1.00%)	33,920명	54,771명	319명 (0.58%)	-15,413명	15,587명	12명 (0.07%)	-39,184명

○ 최근 한달 간 일일 확진자 발생현황



○ 최근 4주간 확진자 현황 분석

구 분		3주 (1.9.~1.15.)	4주 (1.16.~1.22.)	5주 (1.23.~1.29.)	6주 中 5일 (1.30.~2.3.)
주 평균 확진자수	전 국	27,791명	41,727명	94,737명	106,039명
	서울시(전국 대비)	6,374명 (22.9%)	8,978명 (21.5%)	22,384명 (23.6%)	23,911명 (22.5%)
65세 이상 확진자수(%)		531명 (8.3%)	490명 (5.5%)	830명 (3.7%)	1,071명 (4.5%)
감염경로 조사 중 사례(%)		2,264명 (35.5%)	4,108명 (45.8%)	11,851명 (52.9%)	13,030명 (54.5%)
사망자 수		89명 (1.40%)	96명 (1.07%)	39명 (0.17%)	15명 (0.1%)
일 평균 위중증 환자 수		241.4명	175.8명	122.4명	89.0명

2. 주요 추진사항 및 경과사항

① 추진사항

- (백신접종) 2차접종 86.8%, 3차접종 53.1% 완료(2.4. 기준)
- (재택치료) 단계적 일상회복 위한 안전한 「재택치료시스템」 기반 마련
 - 관리의료기관 105개소, 외래진료센터 25개소, 응급의료센터 1개소 운영
 - 지난해 9월 3주 차 7.2% → 2월 1주 차 89.1%까지 재택치료 확대
- (병 상) 코로나19 사망·중증화율 최소화를 위한 중증도별 병상 확보
 - 코로나19 대응 병상 11,259개 확보, 적기 의료서비스 제공
 - 산모, 투석환자 등 치료를 위한 특화병상 운영(모성전문·요양전문병상 등)
- (진단검사) 오미크론 변이로 검사량 폭증 대비 검사 역량 확보
 - 최근 1주간(1.28.~2.3.) 市 직영검사소 8개소, 선별진료소 71개소, 임시 선별검사소 55개소에서 700,590건 검사 수행
 - 신속항원검사(RAT) 도입에 따른 검사 시스템 재정비

② 경과사항

- 단계적 일상회복('21.11.1.) 이후 확진자·위중증환자 급증하였으나, 일상회복 잠시 멈춤 및 신속한 병상확충으로 일시적 안정세 회복
- 그러나 최근 오미크론 변이 증가 및 급격한 확산 위기에 직면하여, 오미크론 대유행에 적극 대응하는 새로운 방역·의료대응 전략 수립 필요
 - 현재 델타보다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이 미국·유럽에서 우세종화되고 전세계 확산 중이며, 국내도 오미크론 우세종화에 따른 확진자 급증 우려

➔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력을 감안, 고위험군 중심의 빠르고 유연한 대응 방식으로 선제적 전환을 추진함과 동시에, 철저한 대비태세 확립을 통한 장기적인 공존 방향 모색이 필요한 시점

3. 오미크론 확산대비 대응계획

□ 중점 추진사항

대 응 전 략

-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전파를 고려, **적시 대응을 위한 선제적 조치** 추진
- 기존 ▲모든 감염원 발견, ▲PCR 검사 기반 진단, ▲격리기반 대응체계에서 **고위험군 중심의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방식으로 전환** 추진

① 기존 3T 방역체계를 「선택과 집중」의 속도전 체계로 전환

- **검사(Test)** 우선순위에 따른 검사역량 집중 및 병·의원급 역할 확대
 - 검사수요 급증 대비 고위험군 중심의 PCR 검사(무료 검사) 우선순위 설정
 - 지역 병·의원 활용 신속항원검사 ※ 신속항원검사 양성인 경우 PCR 검사 실시
 - 市 직영 코로나19 검사소 권역별 4개소 → 8개소로 확대 설치·운영
 - 코로나19 검사자 대기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시민 검사 편의 제고
- **추적(Trace)** 고위험군 중심의 선별조사 및 추적관리 체계 개선
 - 기존 전수검사·투망식 역학조사에서 고위험군 중심으로 단계적 전환
 - 역학조사 자동화(ICT 기반 자기기입식)로 역학조사에 따른 조사자·대상자의 피로감 해소
- **치료(Treat)** 재택치료 비율 확대(→93%) 및 병·의원 중심 체계 전환
 - 경구약 처방확대, 환자 이송체계 효율화, 의료인프라 확대로 안정적 재택치료 제공
 - 재택치료자 동거가족을 위한 「가족안심숙소」 운영 및 방역택시 등 전용 이송체계 마련
 - 지역 병·의원을 통한 검사-처방-치료체계 마련하여 일반의료체계로 복귀

② 오미크론 확산 최대한 억제 등 코로나19 장기 대응역량 강화

- **동네 병·의원 의료체계 전환** 코로나 대응 역할 분담으로 환자급증 상황 대비
 - 호흡기 전담클리닉 50개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RAT) 시행(2.3.), 향후 6개 병·의원 추가 시행 예정으로 총 56개소 운영
 - 병원급 인력요건 완화(최소 의사 1~2명당 환자 100명 → 환자 150명) 등 재택치료 관리체계 변경(2.3.)으로 의료기관 관리 가능 인원 확대
 - ※ 당초 28,210명 → 39,750명으로 관리 가능 인원 11,540명 증가 예정
- **치료 병상확보** 확진자 급증 대비 **5,692병상(+553병상) 확보**
 - 현재 진행 중 5,139병상 외, 오미크론 확산 대비 453병상 추가 확보
 - ※ 453병상 = 행정명령 추가시행 379, 거점전담병원 추가 발굴 74 등
 - 준중-중등 환자치료를 위한 「**긴급 모듈병상**」 100병상 설치·운영 추진
 - ※ 시·고려대의료원·사마리안퍼스 코리아 공동협력, 긴급 모듈병상 설치
 - 5천명 이상 발생 시 병원 입원률 조정 등으로 안정적인 병상운영 도모
 - ※ 병원입원률 조정 : 중(준)증 1.5%→1%, 중등증 2.5%→3%
- **예방접종 지속추진** 3차 접종을 제고 및 4차 접종 대비
 - 2차접종 후 3개월 경과자 대상 3차접종 집중 실시('22.1월~)
 - 면역저하자, 고위험군 등 정부 4차접종 대상범위 결정 시 현장 시행방안 마련

【 예방접종 현황('22.2.4. 0시 기준) 】

대 상 자		누 계		2.3	2.2	2.1	1.31	1.30	1.29	1.28이전
9,401,888*	1차	8,264,286	(87.9%)	1,749	87	29	121	123	1,379	8,260,798
	2차	8,160,859	(86.8%)	7,135	141	40	185	213	3,720	8,149,425
	3차	4,994,356	(53.1%)	58,392	2,610	790	4,514	4,483	58,784	4,864,783

③ 정부 - 시 - 자치구 간 방역 공조체계 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시 방역 공조 강화

- (회의체계) 주 3회 정부-시 방역상황 공유 및 대응방안 논의
- (주요 협력사례) **오미크론發 5차 대유행 대비 정부 방역정책의 선도적 이행**
 - **병·의원 중심 의료체계 전환** : 병·의원 재택치료 도입방안 발표(정부)에 따른 '서울형 의원급 재택치료 모델' 도입 시행(2.3.)
 - **자가검사키트 활용 활성화** : 선별진료소 자가검사키트-PCR 검사 병행 추진(1.29) 및 자가검사키트 본격 도입(2.3.)으로 진단검사체계 개편
 - **외래진료센터 확충** :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면진료를 위한 외래진료센터 13개소 지정·운영(1.28.) 및 쏘 자치구 설치 추진(2월~)
- (市 건의 주요 반영사례) **정부에서 채택하여 시행**
 - **먹는 치료제 투약대상 기준 완화** : 투약대상 연령 완화(65세 이상 → 60세 이상) → 치료제 투약기준 60세 이상(1.22.), 50세 이상(2.7.)으로 순차적 확대
 - **임시선별검사소 사전예약시스템 도입** : 오미크론발 검사수요 폭증 대비 검사자 예약시스템 도입 → 질병관리청에서 2월 中 보급 예정
 - **안심콜-백신접종증명 연계시스템 도입** : 어르신 등 스마트폰 미소지자 접종증명 편의 제고 → 질병관리청에서 2월중 도입 추진 中
 - **신속항원검사(RAT) 활용 확대** : 선별진료소 및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우선검사대상이 아닌 일반시민 대상 신속항원검사(1.29.~)

□ 시 - 자치구 간 방역 공조 강화

- (회의체계) **구청장회의(화), 부구청장회의(목) 매주 번갈아** 개최 방역 현안 논의
- (논의안건) 백신접종, 검사, 확진자 관리, 재택치료 등 방역조치 사항
- (실무협의) **보건소장 중심으로 애로사항 수렴하여** 소관부서별 대책마련
- (향후계획) 방역인력 피로도 완화를 위해 격주 1회로 조정하되, 방역사항 협조를 위해 긴밀한 소통, 협력체계 유지

2

현안 조정 역할 강화로 안정적 시정 운영

시정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현안 발생 시 조정 및 부서간 협업 지원하는 시정 컨트롤 타워 기능 수행

□ 추진방향

-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시정운영 계획 관리**
- **주요 정책 추진** 시 발생하는 **부서간 칸막이 해소** 및 **소통·협력 지원**
- **현안발생 시 긴급회의 소집** 등으로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 '22년 추진계획

-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시정 운영계획 관리 및 이행 지원**
 - 「서울비전 2030」, 「도시기본계획」 등 **중·장기 계획** 및 「성과관리계획」 등 단년도 계획을 연동하여 **시정 운영계획 관리**
 - **역점사업 추진 이행점검**을 통해 **계획 실천 뒷받침**
- **실·본부·국간 정책 조정**으로 주요시책에 대한 **실·본부·국의 협업 지원**
 - 정례·수시 회의체(주요현안회의 등) 운영으로 **관련부서간 소통 및 협업 유도**
 - **조직·예산·인력** 등 **시정자원의 적재적소 투입**으로 **협치 지원**
- **긴급한 현안 발생시 효율적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 **적시성** 있는 상황 전파와 **긴급현안 회의소집**으로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 **코로나19** 등 **다수 부서간 협력 대응**이 필요한 현안에 **협조체계 구축 및 수행**

[주요 컨트롤 타워 기능]

중장기	상 시	긴 급
정책환경 변화 반영 시정운영계획 수립·관리	부서간 정책조정으로 시책 적기추진	현안발생시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3 시정 연구기능 통합운영·관리체계 마련

분산된 시정관련 연구 기능을 총괄·조정하기 위한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미래 시정운영 전략 수립 및 시정 현안문제 해결 지원

□ 현황 및 실태

- 시정 연구기관(서울연구원, 기술연구원)에 대한 **市 지도·감독부서 상이**
 - 서울연구원(기획조정실)과 기술연구원(안전총괄실)의 소관부서 분산
- **市, 투자·출연기관에 시정연구 기능 산재 및 연구성과가 시정현안 문제 해결에 실질적 도움 미흡**
- **연구원 간 유사·중복연구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22년 추진계획

- **市, 투자·출연기관 연구기능에 대한 통합운영·관리체계 마련**
 - 시-서울研-기술研을 중심으로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연구협의체 기능 강화
 - 기존 '서울싱크탱크협의체'(SETTA) → (가칭)'미래연구기획단'으로 재편
- **유사·중복연구 방지, 연구성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검토·평가기능 강화**
 - 연구과제 사전검토 기능을 도입하고, 연구과제 완성도, 정책 활용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체계 마련
- **시정 현안과제 발굴 및 미래 먹거리 연구수행 중점 지원**
 - 미래서울 경쟁력 강화, 도시문제 해결 및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 지원
- **연구과제 진행에 대해 관련 실·본부·국과의 협력 강화**(중간·동향보고 등)
 - 각 기관별 연구결과와 市 세부 실행계획 수립이 분리되지 않도록 상호협력

□ 향후일정

- **시정 연구기능 통합운영 관리체계 구축·운영** : '22. 4월 ~

4 주요 정책 지원을 위한 학술용역 체계적 관리

학술용역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으로 市 주요정책과 현안에 반영 가능한 실행력 있는 학술용역 추진

□ 추진방향

- 시정에 반영 가능한 학술용역 심의를 위해 학술용역심의회 전문성 강화
- 학술용역의 유사·중복 방지와 결과물 공개 제고를 위한 내부 시스템 철저 운영

□ '21년 추진실적

- 학술용역심의회 운영 : 정기(1회) 및 수시회의(6회) 개최, 90건 심의(66건 적정)
- 학술용역의 시정반영 현황

계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지표·모델 개발	사전타당성조사	법령·제도선 개
108건	39건(36%)	38건(35%)	19건(17%)	8건(8%)	4건(4%)

〈 학술용역 추진시 애로사항 〉

- ▶ 학술용역심의회 일부 분야의 전문가 부족으로 형식적인 과제 선정 우려
- ▶ 비공개 관행으로 대내외 공유가 어려우며, 표절 및 유사·중복 연구 방지를 위한 사전 검증 곤란

□ '22년 추진계획

- (심의 강화) **학술용역심의회 전문성 확대 및 심도있는 심의 지원**
 - 전문가가 부족한 보건의료, 아동·청소년·교육 분야의 위원 확충으로 전문성 강화
 - 수시회의 개최(횟수)를 확대하고 회의별 심의건수를 줄여 심도있는 심의 추진
- (공개율 제고) **비공개 학술용역 전수 점검 및 공개 독려**
 - 비공개 학술용역에 대한 전수 조사를 정례화하고, 비공개 유지시 사유서 제출 의무화
 - 학술용역관리시스템, 시누리집(정보소통 광장)등에 대한 단계별 공개 여부 상시 점검
- (유사·중복방지) **사전검증 체계 강화**
 - '과업 내용서'에 대한 표절검사(Copy Killer)를 실시하고 심의 자료로 제공
 - '유사·중복 용역 자체 점검표(사업부서 검증)'에 대한 시정연구담당관의 재검증

□ 향후일정

- 학술용역 운영 개선 지침 시행 : '22. 2월
- 학술용역심의회 위원 위촉 및 심의회 개최 : '22. 3월 ~

5

인구변화 대응체계 및 중장기 로드맵 마련

인구변화에 따른 미래 행정수요를 예측·분석하여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중장기 인구변화 대응전략 수립

□ '21년 추진실적

- 인구변화대응 중장기 전략 마련을 위한 **전문가 TF 구성·운영**(’21.12.~)
 - 인구·미래·정책분야별 전문가 9명 구성, 인구변화 대응방향* 등 논의
 - * 미래 서울의 모습 및 문제점 예측·선제 대응 필요, 광역생활권 특성 반영 등
- 인구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21.12.30)
 - 「서울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서울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제정

□ '22년 추진계획

- 인구변화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인구변화대응 기본계획(5개년) 수립**
 - (전문가TF) 인구·미래·경제·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와 대응방향·전략 논의(월 1회)
 - (여론조사) 인구변화 대응 관련 시민인식조사 등 의견수렴(서울시민 1천명, 4월)
 - (인구변화대응위원회) 15명 내외 구성, 기본계획 자문 심의, 인구정책 제안(6~7월)
- 인구변화 영향을 고려한 시정 추진 위한 **인구영향평가 체계 마련**
 - (평가방안 마련) 평가대상·절차·범위·평가지표 선정 등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
 - (시범운영) 저출산·고령화·1인가구 등 인구 관련성이 높은 주요 사업 우선 대상
 - (평가환류) 인구관점에서 정책 수립 및 평가 결과 개선 이행 권고 추진
 - ※ 향후, 연구결과 및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인구영향평가 제도 전면 도입(’23)

□ 향후일정

- 인구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 : ’22. 하반기
- 인구영향평가 제도화 방안 마련 : ’22. 3월~ 7월
- 인구영향평가 시범운영 추진 : ’22. 8월~12월

2. 시민권의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

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법률지원 대응 강화

② 민생회복 및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

③ 신속 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한 시민권의 구제 강화

④ 무료법률 상담 개선을 통한 시민 법률복지 강화

⑤ 투자출연기관 규정 정비 등 경영효율화 추진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법률지원 대응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 관련 전담 TF 인력을 보강하고 법률 지원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안전도시 서울' 구성에 기여

□ 추진배경

- 중대재해처벌법상 추상적 개념 다수 존재로 혼선 우려
 - 사고발생 시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법 제4조)의 적용 범위 등 추상적 표현
- 市 중대재해 광범위한 관리대상 범위로 관리 어려움 존재
- 법 시행 초기로 참고사례 부족 등으로 관련 질의 증가 예상
 - 관련 월 평균 질의증가 현황 : '21년(1~12월) 1.1건 → '22년(1월) 14건

□ '22년 추진계획

- 질의에 대한 신속 정확한 대응 등을 위해 인력보강 및 전담 TF 신설 운영
 - (전담 인력) 종전 3명(내부 3)에서 6명*(내부 4, 외부 2)으로 확충
 - ※ 임기제 공무원 추가 채용(1명) 및 중대재해 전문 법률고문 위촉(2명)
 - (전담 TF) 전담인력을 중심으로 TF 구성, 법적사항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유관부서 정례회의를 통해 진행사항 공유 및 중요사항·수범사례 등 전파
 - 유형별 법률검토 결과를 축적·분류하여 수범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학습효과 제고
 - 의뢰부서 자체 사전검토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질의 수요 급증에 대비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사건(사례) 분석을 통해 신속한 대응체계 기반 마련
 - 전담 TF를 중심으로 예상 쟁점 파악 및 사례 연구에 집중
 - 서울시의 사례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 및 관계 기관 초청 세미나 개최

□ 향후일정

- 전담 인력 확충 및 TF 구성·운영 : '21.2월~
- 사건사례 분석 및 유관부서 정례회의 개최 : 연중

2

민생회복 및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민생의 회복 및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규제 개혁 추진

□ '21년 추진 실적

- 코로나19·건축·교통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법령·제도개선
 - '19~'21년 발굴한 개선과제 370건 건의, 245건 회신, 100건 수용

〈'21년 주요 개선사례〉

- ▶ 건축법 시행령 개정('21.8.) : 내부·외벽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설치해야 하는 공장·창고의 범위를 일정규모* 이상에서 모든 공장 및 창고시설로 확대
 - * (내부) 공장(연면적 1,000㎡ 이상), 창고(바닥면적 600㎡ 이상), (외벽) 3층 이상 또는 9미터 이상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21.4.) : 재활용(업사이클) 산업의 법적 정의 및 지원근거 마련

□ '22년 추진 계획

- 지역경제 활성화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민생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 수도권 지역에 대한 차별 완화·폐지 등 신산업 육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 서울시만 지정을 제한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지규제 폐지, 강소연구개발특구 이격거리 완화 등
 - 주택공급 확대, 취약계층 보호 등 우리시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규제애로 해소
- 새정부 출범에 맞춰 **주요 정부정책 관련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건의**
 - 탄소중립, 시민안전 강화 등 우리시 주요정책 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
 - 시급한 과제는 소관부처 외에 국회, 국무조정실 등과 협조하여 신속한 개선 추진
- 우리시 자치법규 상 규제의 타당성 재검토를 위한 **등록규제 정비 시행**
 - 등록규제 768건 중 '11~'18년도 등록된 규제 166건에 대한 정비 추진
 - ※ 등록규제: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市에서 등록·관리하는 조례·규칙상 규제

□ 향후일정

-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건의(분기별) : '22. 3·6·9·12월
- 등록규제 정비(반기별) : '22. 6·12월

3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한 시민권익 구제 강화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을 통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침해된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성 제고

□ '21년 추진실적

○ 회의운영 : 연 24회 / 총 983건

행정심판 운영 실적 (2021년, 단위: 건)	재결건수	인용	기각	각하
	983	156(15.9%)	582(59.2%)	245(24.9%)

▶ 1건당 평균 재결기간 단축 : 110일('19) → 104일('20) → 74일('21)

□ '22년 추진계획

○ 대시민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신속한 처리**

- 사건 진행상황 점검 및 체계적인 관리 사건의 위원회 신속 상정 추진
 - ▶ 외부위원(법률전문가) 위원회 참여 확대(기존6명→ 최대8명) 및 분야별 재결례 활용 등
- 민생사건 특별 관리로 처리기한을 단축하여 경제활동 손실 최소화
 - ▶ 정립된 판례가 있는 민생사건의 유형별(일반음식점, 운수과징금 등) 관리로 기간 단축

연 도	2020년	2021년	2022년 목표
평균 재결기간* (민생사건 평균 재결기간)	104일 (83.93일)	74일 (58.59일)	74일 이내 (56일 이내)

*재결기간 : 행정심판법 제45조(60일 이내, 30일 연장 가능)

○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구제 확대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

- '22. 1월부터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市 자격요건 확대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6호)
 - ▶ 기존) 개인회생, 파산 → 변경) 개인회생, 파산, 월 평균소득 200만원 미만
- 자치구와 협조 체계 유지로 행정처분서상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등 안내 문구 기재

□ 향후일정

-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연 24회) : '22. 2월 ~
- 권익구제 사례를 담은 재결례 사례 발굴 및 제작 : '22. 10월

4 무료법률 상담 개선을 통한 시민 법률복지 강화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 해결을 위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법률 상담 개선을 통한 시민 법률복지 강화

□ '21년 추진실적

구 분	마을변호사	시민법률상담실	사이버법률상담	마을법무사	이웃분쟁조정센터
목 적	체계적·지속적인 대시민 법률서비스 지원 및 전문 법조인의 사회 공헌 참여			생활법률 상담 (등기·임대차)	주민 스스로 이웃 간 갈등 해결
상담실적	14,483건	4,206건	2,528건	891건	1,673건

-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지속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률상담 시스템 개선**
 - 상담방식 변경(대면→전화) 및 법률상담 온라인 예약시스템 개발('21.9월)
- **마을법무사 동주민센터 신규 배정 및 생활법률 상담 진행**
 - 법무사 192명 신규위촉 및 23개 자치구 153개 동주민센터 배정('21.6월)

□ '22년 추진계획

- **마을변호사 야간·주말 상담실 운영**으로 이용자 사각지대 해소
 - 야간·주말 상담 실시를 통해 직장인 등 주간 상담이 어려운 시민의 법률복지 향상
 - 확대운영 관련, 동주민센터 수요조사(4월경) 후 5개 권역별 1개소 시범 운영
- **안정적인 법률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해 공익변호사 풀(pool) 적정성 점검**
 - 위촉기간 내 공익활동 실적이 전무한 임기만료자는 재위촉 대상자에서 제외
 - 청문 주재, 위원회 및 주요 TF 참여 등 공익변호사의 시정 참여 확대 추진
- **무료법률상담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제도 개선 방안 모색
 - 제도 인지 경로 등을 포함하여 제도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7월경)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만족도 제고 및 홍보 강화 방안 등 마련

□ 향후일정

- 공익변호사 재위촉·신규위촉 : '22.3월~5월
- 마을변호사·법무사 이용자 만족도 조사 : '22.7월

5

투자·출연기관 규정정비 등 경영효율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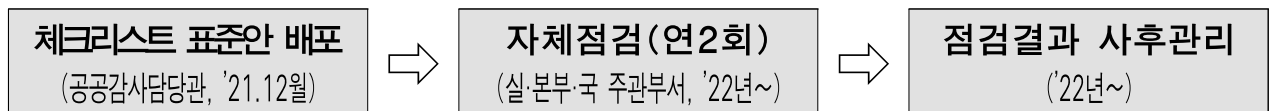
市 산하 투자·출연기관 주요 규정을 상위법령·조례, 행안부 및 서울시 지침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향후 기관의 경영효율화 추진

□ 추진방향

- 투자·출연기관의 불합리한 규정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
- 기관별 서비스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경영효율화 방안 등 마련 추진

□ '22년 추진계획

- **규정정비 미이행사항 후속조치 및 추가 정비사항 발굴**
 - '21년 추진한 규정정비 24개 항목에 대한 미이행 사항 상반기 완료 독려, 이행결과는 경영평가에 반영
 - ▶ 임직원 징계, 공무원 여비규정 준수, 조직·정원표 정관기재, 과도한 수당 제한 등
 - ▶ 총 648건(27개 기관별 24개 항목) 중 597건 완료(92.2%), 51건 미완료
 - 기관 및 주관부서와 함께 불합리한 규정 등 추가 발굴 추진(3월~)
- **경영평가 저조기관 대상 실태분석·효율화방안 도출**
 - 경영평가 저조기관(9개) 대상 「출연기관 경영효율화 용역」 중('21.10.~'22.10.)
 - ※ 시향, 세종문화회관, 디자인, 평생교육, 50+, 디지털, 120다산콜, 공공보건의료, 기술연
 - 기관별 조직, 인력, 내부규정, 경영실태 등 현황 분석 및 효율화 방안 제시
- **복무관리, 비위예방 등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기반 기관별 실국 책임성 강화**



□ 향후일정

- 규정정비 미비사항 모니터링 및 완료조치 : '22년 상반기
- 규정정비 시정명령 이행결과 경영평가에 반영 : '22년 4월~
- 용역결과를 반영한 경영효율화 방안 도출 : '22년 10월

3. 실효성 있는 예산·재정 관리체계 확립

① 주요 재정사업 신속집행을 통한 민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

②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 정비

③ 지방채 적정 발행 및 운용으로 재정건전성 관리

1

주요 재정사업 신속집행을 통한 민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

확정된 예산·기금 등 재정의 신속한 집행으로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마중물 역할 수행

□ '21년 추진실적 및 '22년 목표

- '21년 하반기 실적 : 예산현액의 88% 집행목표 대비 91.7% 집행
- '22년 상반기 목표 : 신속집행 대상액*의 60.5%

* 대상액 : 예산현액 중 인건비성 경비, 매월 균분대상(공공운영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내부거래, 예비비 제외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현액	관리 대상액	상반기 목표액
본청·자치구	72조 2266	32조 0,809	19조 4,089 (60.5%)

※ 기관별(본청·자치구·공기업) 세부 관리대상 및 집행목표는 행정안전부에서 추후 통보 예정

□ '22년 추진계획

-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지킴 종합대책' 조속한 시행**
 - 입차 소상공인 자김자금,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등 현금지원 사업 2월 중 지급 개시
 - 재정효과가 큰 New서울사랑상품권 및 4無 안심금융 공급 등 간접지원 사업의 1분기 집행으로 지역소비 활성화 및 소상공인 자금유통 유도
- **민간 소비·투자 감소 보안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화**
 - 주요사업의 발주, 입찰공고, 계약 등 전 주기 모니터링으로 집행관리의 실효성 강화
 - 반복적 이월 발생 및 집행을 저조한 대규모 투자사업 매주 집행 점검
- **자치구 신속 재정지원 및 신속집행 독려**
 - 자치구의 확장적 재정집행 지원을 위해 교부금·보조금 상반기 60% 이상 교부
 - 자치구 부구청장회의 등을 통해 자치구별 집행실적 공개 및 신속집행 적극 참여 독려

□ 향후일정

- 기관별 집행실적 모니터링 및 사업별 점검 : 수 시
- 상반기 신속집행 기관 성과평가 : '22. 7월

2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 정비

지방보조금 법령 제정을 반영한 제도 정비 및 지방보조사업 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책임성 확보

□ 추진방향

- 지방보조금법령 제정('21. 7. 13. 시행)에 따른 제도 정비
- 지방보조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재정건전성 및 책임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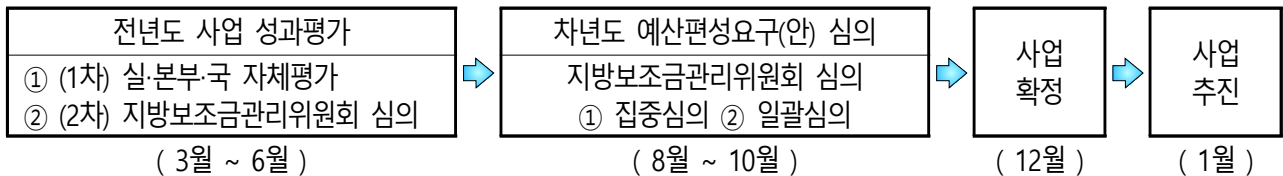
□ 지방보조사업 현황('22.1월 기준) : 692개(통계목 기준), 3조 1,772억원

- 공공단체보조 : 426개 사업, 1조 7,220억원(총 사업규모의 54.2%)
- 민간보조 : 266개 사업, 1조 4,552억원(총 사업규모의 45.8%)

(단위 : 억원, 개)

구분	계	공공단체보조						민간보조															
		소계	자단경	치체상	자치본	교육보	예군성본	소계	민경보	간상보	민단법	간체정	민행보	간사보	민자보	간본보	사복보	회지보	사복법	회지정	운업보	수계보	
총계	31,772 (692)	17,220 (426)	12,286 (289)	1,920 (127)	3,010 (9)	4 (1)	14,552 (266)	2,253 (144)	265 (17)	89 (19)	477 (20)	1,747 (45)	2,256 (15)	7,465 (6)									

○ 추진절차



□ '21년 추진실적

- '21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개정
 - 보조금 카드 사용 영수증 등 미제출, 이행보증보험 분할 가입 허용 등
- '20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추진(총 874개, 2조 3,703억원)
 - 1차 평가(실·본부·국) : 매우우수(108), 우수(210), 보통(395), 미흡(161)
 - 2차 평가(위 원 회) : 지속(55), 축소(13), 폐지(15) *3년 초과 계속사업 자체평가 결과 미흡사업지속의견
- '22년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요구(안) 심의(총 825개, 6조 3,833억원 요구)
 - 집중심의(116개) 결과 : 적정 58개, 조건부 적정 43개, 부적정 15개
 - 일괄심의(709개) 결과 : 원안가결

□ '22년 추진계획

1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 추진(상반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사항 반영

- 관리기능 강화 위한 위원회명 변경 : 보조금심의위원회 → 보조금관리위원회
- 보조사업 분야별 시비 기준보조율 범위 규정(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준용)
- 외부감사인을 통한 실적보고서 적정성 검증(3억원 이상), 감사보고서 제출(10억원 이상)
-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市 홈페이지) 및 제재부가금·가산금 징수 제도 도입

○ 지방보조금 관련 시의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 ‘시비보조금 교부 및 집행실적’ 시의회 제출 규정 신설

※ 법령 제정사항 반영한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개정 작업 병행 중

2 지방보조사업 체계적 관리로 재정건전성 및 책임성 확보

√(성과평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평가대상 확대 : 부실우려사업 별도 선별·평가

√(사전심의) 집중심의 대상 확대 : 민간보조 공모 증액사업 중 5억원 이상 → 3억원 이상

○ '21년 지방보조사업(총 840개) 성과평가('22. 5~7월)

- [1차] 실·본부·국 자체평가 : 전액시비 보조사업의 성과목표 달성 여부 등 평가
 - ▶ 평가결과 미흡사업(20%)은 원칙적으로 '23년도 예산 미반영 또는 감액
- [2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3년 초과 계속사업, 자체평가 결과 미흡사업 중 사업 부서 지속의견사업, 우수·보통사업 중 부실우려사업(집행저조, 반환금 체납 등) 등
 - ▶ 사업의 타당성, 성과달성도 등을 심의하여 사업 지속여부 결정

○ '23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요구(안) 심의('22. 8~10월)

- 집중심의 : 신규사업, 전년 대비 30% 초과 증액사업, 3억원 이상 민간보조 공모 사업 중 증액사업 등
- 일괄심의 : 전년 대비 30% 이하 증액사업, 법령에 의한 연례 반복적 사업 등

□ 향후일정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개정 : '22. 2월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개정 : '22. 상반기

3

지방채 적정 발행 및 운용으로 재정건전성 관리

시민 안전과 민생을 위한 투자사업의 소요 자원 적기 조달을 위해 재정건전성 관리하에 지방채 발행 및 상환 추진

□ '22년 지방채 발행개요

- 발행대상 : 도시철도망 구축, 공공주택 확충,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
- 발행규모 : 26개 사업 **총 2조 726억원**(신규 1조 9,089억, 이월 1,637억)
- 발행절차 : 온라인 전자입찰시스템 방식으로 발행공고 후 투자자 선정

□ '22년 지방채 관리 기본방향

- **사업별 소요에 따른 탄력적 지방채 발행**으로 투자사업 추진 지원
 - 사업별 추진상황, 자원소요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기 자원조달 뒷받침
- **채무관리계획 수립** 통한 안정적·계획적 상환으로 재정건전성 관리
 - 월별·연도별 상환액, 중장기 채무 부담 등 고려하여 상환계획 수립·시행

□ '22년 추진계획

- (발행시기) 사업공정률, 시장금리 및 市 자금수급 등 **종합적 고려 후 결정**
 -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최소화 위해 발행 시기 및 규모 탄력적 조정
- (차입선) 발행금리, 상환전망 등 분석 통해 **유리한 조건의 차입선 선택**
 - 금리 변동성이 높은 시기이므로 채권 전문가 자문을 통해 차입선 적정 선정
 - ※ 채권 금리('22.2.4. 기준) : 모집공채 2.627%(5년물) / 금융채 2.84%
- (상환기간) 일시상환에 따른 재정부담 등 고려하여 **만기 구조 분산 추진**
 - 단기물(1~5년 미만), 중장기물(5년 이상)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 검토

□ 향후일정

- '민생지킴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2,000억원) : '22. 2월
- 지방채 발행 및 상환 지속 추진 : ~ '22.12월

4. 시정 신뢰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및 대외협력

①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수검 및 실적관리

② 민간위탁 효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③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④ 지역 교육격차 해소 지원 추진

1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수검 및 실적관리

국가위임사무 등 전국 공통사무에 대한 지자체 합동평가를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시의 우수한 시정 성과를 가시화 및 시정 신뢰도 제고 추진

□ '21년 합동평가 결과

- 평가기간 : '21.1~4월 ※ 평가대상 실적 : '20.1~12월 실적
- 평가분야 : 5대 국정목표* 116개 지표 ※ 우리시는 98개 지표가 평가대상
 - * ① 국민이 주인인 정부 ② 더불어 잘 사는 경제 ③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④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 평가방법 : (정량평가) 지표별 목표치 달성 여부, (정성평가) 지표별 우수사례 선정
- 평가결과 : (정량지표) 72개 중 51개 달성 (목표 달성률 70.8%) ※ '19년 69.1%
(정성평가) 26개 중 6개 우수사례 선정 ※ '19년 11개 선정
(코로나19 관련 국민평가) 15개 우수사례 중 우리시 1개 선정

□ '22년 합동평가 계획

- '22년도('21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수검('22.1~4월)
 - (정량) 중앙부처 최종실적 확인 및 부적정 실적에 대한 이의신청(2월)
 - (정성) 합동평가단의 성과요약서 증빙자료 검증 및 현장실사 대응(2월)
 - 정부 합동평가단 최종 검증 및 국민평가단 우수사례 평가(3월)

⇒ '22년('21년 실적) 평가결과는 '22.4월 말 행안부에서 공개 예정
- '23년('22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수검 준비('22.5월~)
 - 전년도 평가결과 반영하여 '23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 수검계획 수립(5월)
 - (정량) 실적 수시 관리(연중) 및 실적 미진지표 집중 관리(11~12월)
 - (정성) 우수사례 선정이 중요한 바, 지표 담당부서 대상 컨설팅 실시(9~11월)

□ 향후일정

- '22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수검 및 평가결과 분석 : '22년 상반기
- '23년도 평가 대비 계획 수립에 따른 실적 관리 : '22년 하반기

2

민간위탁 효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민간위탁 사무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명확한 기준 마련하고, 책임성 강화를 위한 회계감사 및 종합성과평가의 제도 개선 추진

□ **민간위탁 현황**(총 420개 사업, 7,641억원) (’22. 1월 31일 기준, 건/억원)

계		예산지원형						자립형	
		소 계		시 설		사 무			
건수	예산	건수	예산	건 수	예산	건수	예산	건수	예산
420	7,641	399	7,617	296	6,278	103	1,339	21	24
100.0%	100.0%	95.0%	99.7%	70.5%	82.2%	24.5%	17.5%	5.0%	0.3%

□ **'22년 추진계획**

- 민간위탁팀을 **‘민간위탁심의팀’, ‘민간위탁관리팀’**으로 재편 및 기능 강화
 - (심의팀) 민간위탁 관련 제도·지침 개선,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지원 강화
 - (관리팀) 민간위탁 관리·감독 강화, 종합성과평가 및 통합회계감사 개선
- 회계감사 실시주체 **일원화로 감사의 전문성 및 일관성 확보**
 - 통합회계감사 대상 사무 확대(현재 10억 미만 원칙 → ’23년 모든 사무)를 위한 지침 마련
 - ※ 단 법령(서울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6조) 등에 따라 별도로 감사를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통합회계감사 용역의 회계연도 개시전 사전발주로 충분한 감사기간 확보
- 평가지표 개선으로 **종합성과평가 결과의 공정성 및 타당성 제고**
 - 비중이 큰 ‘사업성과(35%)’ 지표의 적정성 검토 및 지표 개선 컨설팅
 - 타 평가(주요사업 성과평가, 점검 등) 실시 결과를 종합성과평가에 반영

□ **향후일정**

- 민간위탁 제도 개선 추진(매뉴얼, 지침 등) : ’22. 상반기
- 종합성과평가(총62개 사무) 실시 및 지표개선 : ’22.2월~12월

3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지역과의 교류를 통해 지방-서울간 상생 공동체 조성 및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 도모

□ '21년 추진실적

- 시·도 및 협의체와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시·도간 협력방안 모색
 - 市 주도로 코로나19 예방접종 비용 전액 국비 부담 촉구 공동성명서 발표(9월)
 - 불합리한 법령·제도 적극 발굴(16건), 시도협 협조를 통해 정부에 건의(7건)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2021년 지역상생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
 - 사람·물자·정보 3개 분야 9개 추진과제 36개 사업 추진
 - 온라인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등 대면·비대면 등 탄력적 방식으로 사업 수행

□ '22년 추진계획

- 시민안전 등 시의성 있는 정책과제 발굴 및 시도협 건의 등 지속적인 이슈화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쏠지자체에 영향이 큰 법령제도 개선과제 중심
-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활용해 지방분권 강화 위한 지자체 공동 대응 주도
 - 시·도와 사전 공감대 형성 및 공조로 자치조직권 강화 등 공통 관심사항 관철 추진
 - ※ 대통령 주재 정부-지자체간 정례 협의체로 '22.1.13. 출범 및 1차회의 개최
- 국비확보·분권과제 제도화를 위한 국회·정당과의 입법 및 정책협력 강화
 - 주요 상임위 및 서울 지역구 국회의원 공약 등 고려 입법 및 국비확보 추진
- 서울-지역 우수정책 상호교류 및 상생발전 위한 우호교류협약(MOU) 추진
 - 분야별 우수정책 교류 및 상호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과의 협약 지속 체결
 - 교류 협력사업의 추진현황 및 성과 점검을 통해 상생협력사업의 실행력 제고

□ 향후일정

- 대정부·국회 건의과제 발굴 및 건의 : 상시
- 우호교류협약 체결 대상 지자체 검토 및 추진 : '22. 2월~

4

지역 교육격차 해소 지원 추진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서울 대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 기회제공 및 지역 청소년들의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랜선나눔캠퍼스」 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서울 대학생(멘토)-지방 중학생(멘티) 방과 후 비대면 학습지원
- 국·영·수 등 주요과목 학습지도 및 진로상담(주 2회, 회당 2시간)
- 추진방법 : 市-지자체-KT 간 협력채널 구축 및 기관 간 역할분담
- (市) 대학생 선발, 활동비 지원 ↔ (지자체) 중학생 선발 관리 ↔ (KT) 온라인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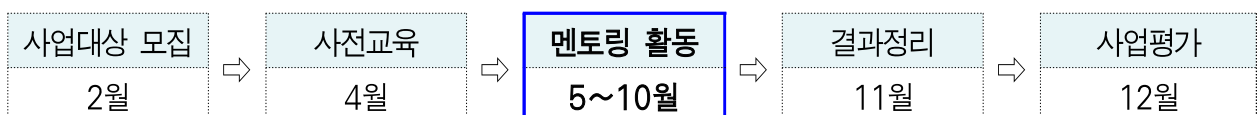
□ '21년 추진실적

- 대학생 162명, 중학생 425명 참여, 비대면 멘토링 활동 추진('21.7~12월)
- 사업 참여자 격려를 위한 멘토 우수사례 공모 및 시상(5명) 실시('21.12월)
- 멘토-멘티 대상 설문조사 결과, 두 그룹 모두 95% 이상 만족('21.12월)

□ '22년 추진계획

- '21년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활동기간, 참여 인원·지역 확대 추진
- (활동기간) 4.5개월 → 6개월로 확대, 멘토-멘티에 실질적 지원 강화
- (참여인원) 대학생 162명, 중학생 425명 → 대학생 200명, 중학생 600명
- (참여지역) 市 MOU 지자체(29개) → 비수도권 전체 기초지자체(160개)
- 주기적인 만족도조사 및 수시평가를 통해 멘토링 질적 향상 및 사업 내실화
- 월별 만족도 조사 결과를 멘토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피드백 제공
- 만족도 미흡 및 수업취소가 잦은 멘토 중도탈락, 예비자 투입으로 수업의 질 보장

□ 향후일정



IV.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기 획 조 정 실

2021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기획경제위원회)

기획조정실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155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 중	검토 중	미반영
계	계	155	104	41	10	-
	시정· 처리요구사항	64	26	31	7	-
	건의 사항	14	1	10	3	-
	기타(자료제출 등)	77	77	-	-	-

시정 · 처리 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 '20년 3월에 실시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보고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은 사업이 5개월 후에 실시한 평가담당관 평가에서는 사업추진방식, 수탁기관의 선정과정 등으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는 것은 서울시 차원의 평가 신뢰를 떨어뜨림 (평가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기간 만료 전 실시하는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와 평가담당관의 평가는 목적과 체계가 상이 ○ 다만,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와 평가담당관 평가결과가 일치될 수 있도록 내부 회의 등을 통해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개선, 일관된 평가방향을 제시한 평가기본계획 수립 등 추진 중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과정에서의 대내외 자문 등을 바탕으로 평가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음
<p>2. 평가 종류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평가 기초에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람 (평가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기조 일관성 유지, 객관성 확보 강화 등을 위해 업무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평가기본계획' 수립 중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평가기본계획 수립(평가담당관) : '22.2월 중 ○ '평가기본계획' 목적과 내용에 맞게 평가 추진 : 연중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3.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수요, 그간의 실적, 효과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이 과학적으로 편성되어야하나 특정사업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관이 사업 편성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예산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예산은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편성되었음 ○ '22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부분야에 대한 사업 구조조정이 시행되었으나, 사업별로 사업의 효과성, 예산지원의 법적근거 및 타당성 유무, 유사중복 여부, 집행실적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추진되었음 ○ 향후에도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시의성이 부족한 사업, 투입 예산 대비 효과성이 미흡한 사업 등을 적극 발굴, 세출 구조조정을 시행하여 시민체감형 재정효율화를 추진하겠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예산편성 : '22.7월 ~ 12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4.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요구한 사항 그대로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누락되거나 부실 제출 됨. 시에서 요구내용을 임의로 축소하거나 취지를 왜곡해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람 (조직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시, 시에서 보유한 자료의 내용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하였음 ○ ‘최근 3년간 부정·비리 적발현황’ 자료는 부정·비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감사위원회로부터 ’19년~’21.9월말까지 적발현황과 조치결과를 공문으로 받아 제출한 것임 ○ ‘최근 3년 민간위탁 회계감사 부적정 사례적발 및 조치내역’, ‘최근 3년 민간위탁 통합회계감사 보고서 사본 및 주요 지적사항’은 외부 회계법인에 의해 실시한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감사의 경우 외부 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시, 감사 유형중 ‘이행감사’를 실시하도록 지침에 규정, 감사 결과 ‘지적사항 없음’은 ‘규정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광의의 회계 부적정 사례를 판단하기는 어려움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요구자료 제출시 요구 취지를 적극 반영하여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겠음
<p>5. 공무원 시정논문 사업에서 수상 논문의 사후관리가 미흡하므로 관리 계획을 수립, 추진해 개선하길 바람 (시정연구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연구논문 공무원의 자발적 연구를 통해 연구역량을 제고 ○ 아울러, 시정연구논문 종합심사 시 부서 의견 수렴 및 시정 활용에 대한 평가지표를 만들어 활용성을 높이도록 하겠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연구논문 추진계획 수립 : ’22년 2월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연구논문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평가지표 도입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6. 지난 10년간 민간위탁 사업평가 과정을 운영하며 위탁사업 선정에 신중하게 해왔는데, 지금 와서 유독 특정분야만 사업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임.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기 바람 (조직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성과평가는 “사업과 관련한 성과 지표의 달성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사업수행 과정상 ‘위법성’까지 평가할 수는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의회, 언론 등에서 지적한 “특정단체에 용역 집중 발주, 특혜지원, 인건비 비중과다” 등 관련 문제점을 평가하는 항목은 종합성과평가 지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 ○ 또한, 금번 문제 제기가 된 시민사회분야 민간위탁 사업은 성과 미흡, 전문성 부족, 잘못된 예산집행 관행 등으로 시의회·언론의 비판을 받아 왔으며, 특히 과도한 인건비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있었음 ○ 시는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계획을 수립, 지침 개선을 통해 대책을 마련한 것임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 추진시 효율적 사업수행 방식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사업에 대해 내실 있는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합리적 평가 기준 등을 마련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7.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내부만족도가 매년 낮은 수준임. 개선계획이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전반적 경영문화를 개선하기 바람. (공기업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업확대, 심층인터뷰 진행 등 개선된 내부만족도 조사용역을 통해 내부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업확대) 기존 만족도조사에 '조직문화 및 후생복지 개선방안 마련'을 과업에 추가하여 진행 - (심층인터뷰) 조직문화 심층 개선안 마련을 위해 각 기관 인사 실무자 1-2인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실태 인터뷰 진행 - (조직문화 개선도 환류) 기관별 조직문화 개선계획 실행력 제고를 위해 설문문항에 환류지표 추가 ○ 2021년 시행된 출연기관 내부만족도 분석결과를 토대로 기관별 조직문화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등 산하기관 내부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결과 및 조직문화 개선방안 안내 : '22. 2월 중 ○ 기관별 조직문화 개선계획 수립 : '22. 3월 중
<p>8.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사회적 책임평가 강화에 고졸생 취업비율 상승 및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 제시되어 있으나, 반영 안됨. 개선 바람. (공기업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투자·출연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가감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출연기관 의무고용률 제고를 위해 가감점 폭을 확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최저 -1.5, 최대 +3.0 → 최저 -2.0, 최대 +4.5 ○ 고졸생 취업비율은 '21년부터 지표 배점을 확대 (0.25점 → 0.5점)하여 관리 중으로, 기관별로 고졸생 취업자를 확대 독려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진행 : '22.4월~8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9. 서울시 '22년 예산편성운영기준 수립 내용에 행안부 '2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기재된 주민참여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예산편성이 반영되지 않음. 개선 바람 (예산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검토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의 '지방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은 국가정책 기본방향과의 효율적인 연계 등을 위하여 행안부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예산편성 과정에서 고려가 필요한 사항임 ○ 지방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예산편성 방향, 자원 배분 중점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 수립함 ○ '23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수립 시, 市 재정상황 및 투자중점, 행안부 '지방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23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수립 : '22.8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0. 서울시 공사의 이사회 참석률이 낮음. 특히 교통공사, 농수산식품공사 참석률이 낮아,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공기업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 참석률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음 ○ 특히, 市 의견이 이사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부서 당연직이사 참석 독려 중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기관 및 市 지도·감독부서에 당연직이사 참석률 제고 위한 일정 사전협의 및 적극적 의견개진 강조(공기업담당관-217호, '22.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할 경우, 과장급 이상 대리참석을 통해 이사회에 市 의견이 개진되도록 노력 - 심도있는 안전검토 위해 각 기관에 이사회개최 7일 전까지 안전을 송부토록 조치하였음
<p>11.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직원 내부만족도 조사 뿐 아니라 기관에서 계약맺은 위탁업체(콜센터)의 만족도 조사도 실시하고 결과보고 바람. (공기업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검토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기관 내부만족도 조사와 별도로, 위탁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 추진을 검토 중에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기관 내부만족도 조사는 출연기관의 승진제도, 조직문화 등 출연기관 내부 조직체계와 관련된 조사로, 위탁업체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만족도조사 필요 ○ 만족도 조사 외에도 투자·출연기관 위탁업체 직원만족도 제고를 위해 위탁업체 노동자 근로조건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수탁기관 및 노동자 간 소통창구 활성화 - 근로기준법 준수 등 위탁업체의 근로조건 등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2. 시민들의 권익·민원에 대한 행정소송 증가는 서울시정에 대한 불만의 반증임. 전반적인 행정기조와 행정소송 원인에 대해 검토 및 대책 필요 (법률지원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검토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행정소송 현황 <table border="1" data-bbox="628 499 1385 600"> <thead> <tr> <th>구분</th> <th>2019년</th> <th>2020년</th> <th>2021년</th> </tr> </thead> <tbody> <tr> <td>접수(건)</td> <td>192</td> <td>271</td> <td>291</td> </tr> </tbody> </table> ○ 행정소송의 경우 새로운 판례의 법리 적립이나, 법규의 시행·고시 처분 등에 따라 유형별 사건이 해당연도에 집중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예배 및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소송이 다수 제기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관련 사건: '21년 59건(전체 접수 건중 약 20%차지) ○ 행정처분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정보공유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사건의 방지를 위해 소관부서에서 필요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소송진행상황 및 결과 공유(예시, 처분의 절차 하자 등) ○ 사업 추진시부터 전문적·체계적 법률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법원 판결 추세를 법규, 제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음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접수(건)	192	271	291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접수(건)	192	271	291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3. 서울시 바로세우기 관련 1조 예산 근거자료에 명시된 사업들이 모두 예산 삭감과 사업중단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사업 중단 등에 따른 대책 필요 (예산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른바 ‘서울시 바로세우기’는 민간위탁 사업과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을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자리매김하려는 과정으로, 관련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하였음 ○ 예산 조정과정에서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 미흡, 민간위탁금 편성 부적절, 자치구 사무로 운영비 지원 근거 부재, 타 사업과 유사·중복인 사업을 대상으로 전년대비 감액 편성하였으나, 모든 관련 사업을 일괄 감액한 것은 아님 ○ 편성과정에서 일몰된 사업이 일부 있으나, 기존 유사·중복사업이 존재하는 사업과 평가결과가 미흡하여 공익상 불요불급한 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종료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였음
<p>14. 투자출연기관의 조직문화 및 비위 관련하여 비위행위자의 징계강화 추진사항들에 대한 임원 인사규정 근거 미비사항 검토 및 대책 필요 (공기업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인사규정 관련 규정정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 임원 인사규정 제정 및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세분화(감봉, 정직 추가), 비위행위자 징계감경 불가 및 징계효력 구체화, 징계수위 감경불가, 의원면직 제한, 직위해제시 보수감액 기준 규정 기재 ○ 27개 기관 중 21개 기관 정비 완료('21.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이행 기관(6개) '22년 상반기 내 완료예정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5. 2050 탄소중립(기후환경) 관련 예산 편성의 사전협조가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한 절차 검토 및 대책 필요 (예산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시범 운영계획」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9956호, '21.7.16.)에 따라 '22년도 본예산 편성 시 3개 실·국·본부(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대상으로 기후예산제 시범 실시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년 시범 실시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기후예산제 실시 기관 확대 등 기후예산제 의무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 대비를 위해 예산안 조정 시 기후예산서 반영 협조 ※ 기후예산제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계류 중
<p>16. 'ESG'정책(기후예산) 확대를 위한 서울시 정책 검토 및 적용방안 필요 (환경정책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기후예산제 도입방안 수립 연구('20.9.~'2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예산 분류체계 확립, 기후예산서 작성기준 제시 등 ○ 기후예산제 시범실시('2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의 2022 회계연도 예산 대상 - 기후영향 사업 125개, 3,739억원을 편성심의 중이며, 편성요구 기준 온실가스 101만톤 감축 예상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정책과) '23년도 회계연도 예산편성 시, 기후예산제 시범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전 기관 도입 추진 ○ (예산담당관) '23년 예산안 조정 시 기후예산서 반영 검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7. 확대재정을 포함한 위드코로나 대응 예산편성 검토 및 방안 필요 (예산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적 일상회복,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적극적인 세입 추계,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역대 최대규모인 44조 2,190억원을 '22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음 -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한 민생·방역대책 추진을 위해 8,576억원 편성 ○ 향후 추경예산 편성 시에도 취약계층 지원 및 방역체계 강화에 집중 투자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추경예산편성 : '22년 상반기 중
<p>18. 민간위탁운영평가위 심의 절차 거친 후 수탁기관 고용승계 비율 조정 관련 25%를 80%까지 고용승계하는 방향으로 재검토 필요 (조직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검토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번 지침 개정시 주요사항에 대하여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승계(80%)의무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음 ○ 다만, '특별한 사정(사무의 폐지·축소, 내용변경으로 인한 필요 인력의 감소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모든 사무에 대하여 일률적 80% 승계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사무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것으로 보임 ○ 또한 경비·청소 등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근무자에 대해서는 고용승계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승계 비율 조정과 관련하여 기 마련된 규정 운영후, 미비점 발생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9. 마을변호사, 마을법무사 상담신청 시민들에게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하여 상담해 주기를 바람. (법률지원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변호사에게 알기 쉬운 용어 사용과 친절한 상담에 대한 협조 요청 공문 발송 및 상담 매뉴얼 배부를 통해 상담을 받는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변호사 등 1,054명에게 관련 공문 발송('21.9.29.) ○ 마을변호사 이용자 만족도 조사 문항에 변호사의 쉬운 법률용어 사용에 대한 항목 추가하여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변호사 대상 협조요청 공문 정기 발송(반기별 1회) ○ 마을변호사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22.7월)
<p>20. 투자출연기관 임원인사 시 비상임이사도 임원규정에 포함시키도록 규정 변경된 것과 관련, 노동이사직에도 해당 규정 적용이 적절한지 재검토 필요 (공기업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이사는 비상임이사이면서 직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며, 비위행위 및 도덕적 해이에 대하여 이미 직원인사규정 등에 의해 신의성실 및 품위유지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임원인사규정 적용에 의한 추가적인 불이익은 없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21. 투자출연기관 평가시 노동이사제 배점을 0.5점에서 추가 상향 조정 검토 및 기관평가 강화 필요 (공기업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점상향보다는 기관 의견수렴 후 평가 내용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년 투자출연기관의 해당지표 평가결과 만점에 가깝게 득점하였음(출연기관 평균: 0.46, 투자기관 평균: 0.48) - 현재 단계에서는 단순히 배점을 상향하는 것은 변별력 있는 평가가 되기 어려운 바 '22년 기관 의견 등을 수렴하여 평가내용을 보완하도록 하겠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년도 경영평가 편람개선 시 해당 평가내용 보완 : '22.9월
<p>22. 행안부(지방공기업평가원)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고, 이에 대한 개선 필요 (공기업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자치분권위원회의 권양 이양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행정안전부가 수행하고 있는 경영평가권을 이양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22년 지방일괄이양법 본격 추진 시 지방이양 사무발굴의 일환으로 지자체 투자기관 평가권한 이양을 건의할 예정임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분권위원회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건의과제 제출 요청 시 해당 권한을 이양토록 추진(연중 수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23. 지방공기업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를 토대로 평가지급률과 평가액을 결정하는 '서울시 핵심가치평가'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공기업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자치분권위원회의 권양이양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에 의거하여 행정안전부가 수행하는 중인 경영평가권을 이양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22년 지방일괄이양법 본격 추진 시 지방이양 사무발굴의 일환으로 지자체 투자기관 평가권한 이양을 건의할 예정 -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경영평가 개선 의견조회 시 평가체계 개선의견을 제출할 예정임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평가 개선 의견조회(행정안전부)시 해당 권한 이양 및 평가체계 개선 요청 : '22. 6~7월
<p>24. 지역상생교류사업 대부분이 목표에 비해 실적이 부진함. 개선 바람. (대외협력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검토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19 장기화 및 델타변이 발생 등으로 일부 지역상생 교류사업 추진 실적이 낮았음 ○ 각 사업별 문제점 및 조치 계획을 점검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거리두기 단계 변화에 맞춰 탄력적·유연한 사업 추진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별 추진 계획 수립 : '22. 2월 중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25. 서울시와 지방 간 실질적인 지역상생 확대를 위해 지역상생 교류사업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편해 주기 바람. (대외협력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검토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사업 추진 시 전년도 사업 추진의 개선점, 지역 수요 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을 내실화하여 추진하고, ○ 서울과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상생 교류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상생 추진계획 수립 : '22. 2월 중 																				
<p>26. 기획조정실 직접 수행 외에 다른 실국의 지역상생교류사업도 기초실의 실적으로 하고 있음. 사업의 명확한 목적과 계획수립을 통해 연관성이 부족한 타 실국의 사업은 배제해 주시기 바람. (대외협력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검토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교류 사업 특성상 농수산물 판로개척, 문화·관광 교류 등 타 부서와의 연계를 배제할 수는 없으나, ○ 기획조정실 주관으로 서울과 지역의 상생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추진하겠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사업 발굴 및 추진 : '22. 2월 중 																				
<p>27. 소청심사의 지연을 방지하고, 적절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법무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청심사 '21년 중 총 7회 개최(결정기간 127일) ○ 최근 3년 간 평균 결정기간 <table border="1" data-bbox="624 1668 1426 1827"> <thead> <tr> <th>심사년도</th> <th>'19년</th> <th>'20년</th> <th>'21년</th> <th>평균</th> </tr> </thead> <tbody> <tr> <td>결정기간</td> <td>122일</td> <td>147일</td> <td>127일</td> <td>132일</td> </tr> <tr> <td>개최횟수</td> <td>7회</td> <td>7회</td> <td>7회</td> <td>7회</td> </tr> <tr> <td>접수건수</td> <td>103건</td> <td>67건</td> <td>95건</td> <td>88건</td> </tr> </tbody> </table>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최소 8회 이상 개최로 결정기간 단축 추진 * 소청심사위원회 통산 6~7회 개최 	심사년도	'19년	'20년	'21년	평균	결정기간	122일	147일	127일	132일	개최횟수	7회	7회	7회	7회	접수건수	103건	67건	95건	88건
심사년도	'19년	'20년	'21년	평균																	
결정기간	122일	147일	127일	132일																	
개최횟수	7회	7회	7회	7회																	
접수건수	103건	67건	95건	88건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28. 소청심사위원회의 인용률이 높으며, 소청 판단 기준을 주관적 판단보다는 명확하게 객관화시킬 필요성이 있음. (법무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징계 처분의 취소, 변경 시 의결정족수 강화('21.12.) 당초) 재적위원 2/3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합의 변경) 재적위원 2/3 출석, 출석위원 2/3 이상 합의 -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중징계에 대해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여 중징계 처분의 감경 제한 ○ 성비위 무관용 원칙 및 중징계 처분에 대한 엄격 심사 - '21년 심사사건 내 성비위 사건(6건) 중 인용 사례 없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비위 무관용 원칙 및 중징계 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 엄격 심사 및 적용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29. 투자심사위원회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분야별로 복수의 인력을 위촉하고 있으나 일부 분야의 경우 특정 전문가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침을 볼 수 있음.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재정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심사위원회는 연평균 9회 내외로 개최 중이며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민간전문가 총 100명(내부 3명 별도)을 2년 임기로 위촉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심사위원회 본회의 : 총 15명(외부12, 내부3) 이내 ○ 일부 분야에 집중된 투자심사 대상의 심사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시정 이해도 및 심사경험이 우수한 해당 분야 전문가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분야('19~'21년) : 교통·개발 41%, 문화관광 23%, 행정 11%, 기타 25% ○ 중복참여 문제는 '21년부터 참여 횟수를 2회 이하로 제한하여 대폭 개선되었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위원 참여를 통해 투자심사의 공정성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3회 이상 참여 : '19년) 4명 → '20년) 12명 → '21년) 없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율 고려하여 투자심사 위원 선정 : '22.2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0. 균형발전담당관의 투자심사 사업 조사(사후평가)는 투자심사위원회가 추진에 앞서 실제 이행 내용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있으므로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 바람. (재정담당관)

추진상황 : 추진중

추진내용

- 투자심사 사후평가는 최근 3년간 투자심사를 거친 사업에 대하여 예산반영현황·조건이행여부 등 점검을 매년 시행함
- '21년 사후평가 대상 : '18~'20 투자심사 의뢰사업 500건

▶ 예산반영현황

사업	구분	계	2018	2019	2020
총 계	합 계	500건 (100%)	150건	178건	172건
	반영	444건 (88.8%)	135건	166건	143건
	미반영	56건 (11.2%)	15건	12건	29건

▶ 조건부 추진사업 조건이행여부

사업	구분	계	2018	2019	2020
총 계	합 계	299건 (100%)	80건	103건	116건
	완료	151건 (50.5%)	52건	66건	33건
	이행중	134건 (44.8%)	26건	32건	76건
	미이행	14건 (4.7%)	2건	5건	7건

- 투자심사 사후평가는 그간 내부보고로 결과를 관리하였으나, 앞으로는 투자심사위원회에 사후평가 결과를 보고하여 위원회의 피드백 기능을 강화하겠음

향후계획

- 투자심사 사후평가 결과 투자심사위원회 보고 : '22. 3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31. 사업부서에서 투자심사위원회의 조건부추진 의견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행한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 검증할 방법이 없음. 실질적인 조사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재정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년도 투자심사 결과 (총 145건, 4조 9,433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결과 : 적정 40건(27.6%), 조건부추진 86건(59.3%), 재검토 19건(13.1%) - 심사분야 : 교통 56건(38.6%), 문화관광 31건(21.4%), 일반공공행정 14건(9.6%) 등 ○ 조건부 추진사업의 조건이행여부는 투자심사위원회 및 예산담당관에서 심사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심사 사업의 조건부 추진은 예산담당관이 예산요구서 심사과정에서 조건부 추진의견 이행여부를 심사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심사 조건부추진 사업에 대한 예산담당관 심사 상시 지원하여 자의적 해석의 논란이 없도록 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부추진 관련 투자심사위원회 회의자료 및 전문기관 검토 등 활용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32. 시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해서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한 홍보현황을 보면 여러개의 리플릿이나 홍보방법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줄었음. 개선이 필요함. (법무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반기 홍보('21.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심판 청구방법 및 행정심판 진행절차 등 안내 리플릿 제작 및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안내 온라인 배너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플릿) 자치구 25개소·동 425개소, 10,000부 제작·배포 ▶ 배 너)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하반기 홍보('21.10월,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심판 및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리플릿 제작('21.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시설 및 자치구 등 1,465개소, 23,000부 제작·배포 -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요건 확대 안내 및 서울특별시 행정심판 비용지원 제도 안내 홍보 리플릿 제작('21.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시설 및 시·구 등 1,461개소, 23,500부 제작·배포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시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다른 방안 발굴 추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3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의 단서 조항은 민간위탁기관 노동자들을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수정한 것으로 보임. 개선 필요 (조직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특별한 사정’에 대한 예시를 명시한 것은 불분명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갈등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임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민간위탁 관리 지침 중 “고용승계 관련” 개정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승계의 예외 사항인 “특별한 사정”에 대한 예시(정부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사항, 사무종료, 운영방식 전환 등) 제시 - 고용승계 범위의 조정이 가능한 경우(사무의 일부 폐지 및 축소 등으로 인한 필요인력 감소, 위탁기관 종사인원이 극소수 등) 및 승계범위도 예시(25%~80%)로 제시 </div>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분야(경비, 청소 등 포함) 등에서는 고용승계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
<p>34. 시민단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센 만큼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를 유발한 생태계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는 책임 의식을 가지고 기획조정실에서 합리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바람. (조직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행적 추진되어온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시민 수요와 눈높이를 반영하여 사무의 필요성 및 수행방식의 적절성 등을 원점 재검토하고 있음 ○ 성과 미흡, 예산편성지침 위반, 유사·중복된 사업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였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리적 민간위탁 사무 추진을 위하여 총괄부서(조직담당관)의 책임성 강화 방안 마련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35. 시장에 따라 민간위탁 종합평가, 감사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추진하기 바람. (조직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성과평가의 목적은 “주로 사업과 관련한 성과 지표의 달성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며, 위탁사무의 방만 운영 및 운영상의 위법성 등은 감사의 대상임 ○ 종합성과평가에서 평균이상의 점수를 받았다고 하여 수탁기관 운영에 있어서 관련 규정 미 준수 등 불법·부당한 사례가 없다고는 볼 수 없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성과평가와 타부서에서 실시하는 감사·평가간 상이한 결과로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종합성과평가의 지표를 개선하는 등 실효적 방안 마련하겠음
<p>36. 최근 10년간 민간위탁 현황, 중간지원조직 운영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 상세히 제출하길 바람. (조직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10년간 민간위탁 현황과 중간지원조직 현황에 대해 제출 완료하였음('21.11.2.)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37. 서울시 바로세우기 관련 분야를 선정하게 된 경위, 예산삭감의 근거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정치적인 의도로 사람을 줄이거나 사무의 일부를 축소/폐지를 결정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예산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바로 세우기 발표가 있는 후 이와 연계하여 마을, 협치, 공동체 등 관련 사업들이 예산 편성과과정에서 심도있게 검토된 것은 사실이나, ○ 바로세우기 관련 사업도 타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사업의 효과성, 예산지원의 법적근거 및 타당성 유무, 유사중복 여부, 집행실적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음 ○ 정치적인 목적으로 관련 사업 축소/폐지를 결정한 것은 아니며, 예산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사업을 대상으로 재구조화를 추진하였음
<p>38. 납세자 보호관 업무 중 세무상담의 추진실적에 비해 고충민원 추진실적이 낮음. 실무인력, 조직체계, 예산 등을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의 취지에 맞게 운영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법무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년 시·구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등 3,106건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충민원 148건, 세무상담 2,920건, 기타 38건 ○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트위터, 자치구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7월) - 포스터, 리플릿 등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 게시 및 배포(10월, 11월) ○ 행안부에 제도 개선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충민원 등 권리구제 신청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건의 등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자보호관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홍보(4월, 10월), 포스터 제작·배포(5월, 11월) -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 뒷면을 활용한 추가 홍보 등 ○ 납세자보호관 제도개선 과제 발굴·건의: 수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39. 서울시 인구변화 대응체계 및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입안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통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시정연구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 입안 과정에서 서울시 인구·가구 현황,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 인구이동 추이, 장래인구 추계 등 관련 통계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였음 - '20년 기준 합계출산율 전국 최저 기록(0.64명) 및 주거부담에 따른 타 수도권으로의 전출 증가 등 자연적·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서울 인구 지속적 감소 추세 - 고령사회 진입 및 1인가구 증가 등 인구·가구 구조변화 심화 ○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 및 시행('22.1.1.) ○ 향후, 중장기 전략 및 인구변화대응 정책 마련을 위해 국가 인구·가구 통계뿐 아니라 분야별·부처별 통계 지표 등을 지속 모니터링 하겠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기관별 인구 관련 통계자료 모니터링 지속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40. 투자 출연기관들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올해 들어 후퇴하고 있음, 경영평가 항목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비율 확대 등 개선방안 고민 바람. (공기업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투자·출연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가감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출연기관 의무고용률 제고를 위해 가감점 폭을 확대 적용 ※ 현행 최저 -1.5, 최대 +3.0 → 최저 -2.0, 최대 +4.5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진행 : '22.4월~8월
<p>41. 민간위탁 관련 잘못된 부분은 개선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뭉뚱그려서 대못이라고 표현하면서 비상식적인 수준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함. (예산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 등 일부분야에 대한 사업 구조조정이 시행되었으나, 사업별로 사업의 효과성, 예산지원의 법적근거 및 타당성 유무, 유사중복 여부, 집행실적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추진되었음 ○ 예산 조정과정에서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 미흡, 민간위탁금 편성 부적절, 자치구 사무로 운영비 지원 근거 부재, 타 사업과 유사·중복인 민간위탁사업을 대상으로 전년대비 일부 감액 편성하였으나, 이는 민간의 전문성 활용이라는 민간위탁 사업을 본래 취지에 맞게 자리매김하는 과정이었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42. 서울시는 그 전에도 민간위탁의 특정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민간위탁 개선대책을 추진해 왔음. 지금처럼 민간위탁의 특정분야를 특정해서 전체가 잘못된 것처럼 하진 않았음. 정치적인 이용 지양 요구함. (조직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는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그간 시의회·언론 등의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였음 ○ 금번 지침개정도 그간의 지적사항을 근거로 하였음 ○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은 모든 민간위탁 사무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반드시 특정분야를 개선하려는 목적은 아님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반영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43. 의무고용승계는 중요한 가치임. 대부분의 수탁기관들은 법인이 바뀌어도 80%이상을 의무고용을 했었음. 그러나 이런 지침이 잘못된 것처럼 문제가 일어난다고 한 것은 침소봉대임. (조직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기관 변경시 고용승계 80% 유지 원칙은 변함이 없음 ○ 금번에 지침을 개정하면서 ‘고용승계’와 관련하여 보완한 사항은 ‘특별한 사정’의 예시를 제시하고, 고용승계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임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기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자·전문직 등은 제외한 “안전, 청소, 경비 등”에 종사하는 일반 노동자분들의 고용에 대해서는 적극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
<p>44. 민간위탁의 개수와 업무가 늘어난 만큼 민간위탁팀의 인력을 보충해 주기를 바람. (조직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관련 팀 증설 및 인력 보강하여 민간위탁사업 관리 및 체계 강화 - 기존 민간위탁팀을 ‘민간위탁심의팀’·‘민간위탁관리팀’으로 분리·재편 및 인력(정원 4명) 보강('22.1.1.字)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45. 단계적 일상회복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방역과 특히, 병상의 확보가 중요함. (보건의료정책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일상회복추진단」 구성·운영 : '21.1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장(시장), 부단장(행정1부시장) 등 ○ 「서울시 일상회복 민간자문단」 구성·운영: '21.11.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 분야) 코로나19대응 자문위원회 운영 - (민생 분야) 민간 전문가 POOL 운영 ○ 「서울시 일상회복추진단」 회의 운영(21회) ※ '22.1.4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대응현황 및 서울시 일상회복 추진계획 논의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주요 논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적 일상회복 대비 의료대응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市 직영 검사소 확충 등 검사역량 확대 ▶ 병원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병상 확충 ▶ 예방접종률 제고 ▶ 재택치료 관리인력 확충 및 이송체계 체계화 등 - 코로나19 위기극복 민생경제대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 부담·불편 없는 '4無 안심금융' 추가 공급 ▶ 코리아세일페스타 연계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전' ▶ 상생상회 '전국 농특산물 특별전' 등 - 관광분야 경기회복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쇼핑페스타 추진 ▶ 특구활성화 및 시민의 관광 기회 확대 등 </div>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상황을 고려,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서울시 일상회복추진단」 지속 운영을 통한 방역체계 확립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6. 중증 병상 확보를 위해 공공병원 시립병원의 중증병상 확보된 곳이란 곳 밖에 없음, 시립병원들의 역할에 대한 변화, 발전, 의료의 질에 대해서도 발전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음.
(보건의료정책과)

추진상황 : 추진중

추진내용

- 시립병원 중환자 병상은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109병상 운영 중이며,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은 보라매병원 8병상 운영 중

연번	병원명	중환자병상	코로나 19 대응 중환자 병상 운영
계		109	8
1	서울의료원	31	-
2	보라매병원	53	8
3	서남병원	16	-
4	동부병원	9	-

※ 서울의료원10병상 준중증 병상 운영

<시립병원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대응 문제점>

- ▶ 감염병 전담병상 확대운영을 위해 의료인력을 전담병상에 우선 배치
- ▶ 감염병 관련 전문과목 의사 및 중환자실 근무 경험 간호사 부족
- ▶ 감염병 중환자 병상 운영시 필요한 음압병상 부족
- ▶ 향후 신종 감염병 유행 시 서울시 권역별 대응 체계 확보를 위한 권역별 중환자 병상 확대 필요

향후계획

- 시립병원 중환자 병상 역량 강화
 - 시립병원 4개 종합병원 중환자 병상은 현재 109병상으로 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131병상까지(22병상 증) 확대 운영 예정

연번	병원명	중환자 병상		
		운영중	확대안	증감
계		109	131	22
1	서울의료원	31	39	8
2	보라매병원	53	65	12
3	서남병원	16	18	2
4	동부병원	9	9	0
5	서북병원	0	-	-

※ 중환자의 경우 다중질환자가 위주의 다양한 전문 과목 의료진이

필요함에 따라 시립병원 중 종합병원에 한정하여 중환자 병상 확충

-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 신축 개소에 따른 중환자 병상 확보('21.10월)
-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센터 건립으로 병상확보('24년 완공)
- 서남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을 통한 병상 확보('23.12월 완공)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47. 특별회계 계정별 지방채 규모가 상당히 크고, 여전히 타회계 전입금이 크며, 많게는 15개 실국에서 하나의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음, 관리 측면에 대한 개선 필요. (예산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22. 1월 현재 운용중인 특별회계는 12개(17개 계정)이며, 법령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특별회계와 조례상 설치하고 있는 특별회계로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상 설치·운영 : 9개 회계·계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국민주택사업계정,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소방특별회계(소방정책사업비계정, 인건비계정),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 조례상 설치·운영 : 8개 회계·계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관리계정, 주차장계정, 교통개선분담금계정),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정비추진사업계정, 도시개발특별회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균형발전특별회계 ※ 주택사업특별회계의 2개 계정은 법령상 의무 설치·운영중이며 1개 계정은 조례상 설치·운영중 ○ (검토방향) 특별회계별 수요와 필요성, 중복여부 등 전수조사 후 존치여부 및 통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달성 여부 및 설치 목적 유사 여부 검토, 수지 분석 등을 통해 법정 설치 특별회계는 운영체계 개선 도모, 조례 설치 특별회계는 통·폐합 등 검토 - 지방채·타회계 전입금 과다문제 및 관리측면에서도 검토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12개 특별회계에 대해 최근 10년간 세입·세출 등 운용현황과 주요사업 추진실적 등 운영실태 분석 중이며, '23년 예산안 편성 시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정비 추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48. 市청년활동지원센터 직장 내 괴롭힘 해결을 촉구하길 바람. 청년, 노동 정책이 후퇴하고 있음. (노동정책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조사 진행 중 ('21. 10월 신고) ⇒ '22. 1월 중 조사완료 예정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노동지청 조사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 미래청년기획단 ○ 市 민간위탁기관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22.) 및 가이드라인 마련('23.) - 노동정책담당관
<p>49. 식품진흥기금 관련하여 목적이 그 외에 식중독 예방, 음식문화 개선, 나트륨 섭취 등으로 일반회계 사업과 다른 점이 없어 보임, 일반회계로 진행 가능한 사업은 일반회계로 진행해 주기 바람. (재정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일반·특별회계로 추진 가능한 사업은 전액 삭감 또는 축소 조정 시행 중임 ※ '22년 어르신 복지증진 공모사업 등 2개 사업 일부 감액, '21년 잠실(목동) 야구장 유소년 야구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2개 사업 전액 미반영 ○ 식품진흥기금 등 기금 성과분석 및 정비방안 연구*를 통해 일반회계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하겠음 * 기금 성과분석 및 정비방안 연구(서울연구원 자체과제)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 성과분석 및 정비방안 연구(서울연구원) : '22. 2월~8월 ○ '23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조정 : '22. 8월 ~ 9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50. 사회복지기금에서도 일반회계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해당 기금의 목적에 나와 있는데 검토 바람. (재정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수립 시 일반·특별회계로 추진 가능한 사업은 전액 삭감 또는 축소 조정 시행 중임 * '22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시 어르신 복지증진 공모사업 등 2개 사업 일부 감액 ▶ 일반·특별회계로 추진 가능 사업 감액 조정 사례 (단위 : 백만원) <table border="1" data-bbox="608 752 1444 929"> <thead> <tr> <th>연 도</th> <th>기 금 명</th> <th>사 업 명</th> <th>요 구</th> <th>조 정</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2022</td> <td>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td> <td>어르신 복지증진 공모사업</td> <td>702</td> <td>△392</td> </tr> <tr> <td>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td> <td>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급</td> <td>6,000</td> <td>△1,20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기금은 '22년 존속기한 도래 예정 기금으로, 존속기한 연장 검토 시 일반회계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하겠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기금 목적사업 적정성 및 존속기한 연장 검토 : '22. 2월 ~ 8월 ○ '23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조정 : '22. 8월 ~ 9월 	연 도	기 금 명	사 업 명	요 구	조 정	2022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어르신 복지증진 공모사업	702	△392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급	6,000	△1,200
연 도	기 금 명	사 업 명	요 구	조 정											
2022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어르신 복지증진 공모사업	702	△392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급	6,000	△1,200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51. 서울시 기금의 세입구조를 봤을 때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타회계전입금 비율이 훨씬 높고, 타 회계 의존도가 높음. 개선 필요 (재정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총수입 대비 일반·특별회계 전입금 비율 50% 이상 기금은 전입금 축소 조정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회계연도 타회계 의존율 50% 이상 기금 : 성평등기금, 체육진흥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대외협력기금 ○ 기금 존속기한 연장 검토 시, 자체재원이 없고 타회계 의존율이 높은 기금의 경우 개선방안 마련·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7개 기금(11개 계정) 존속기한 도래('22.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계정, 투자계정), 기후변화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성평등기금, 사회복지기금(노인, 장애인, 자활, 주거지원계정), 남북교류협력기금, 체육진흥기금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존속기한 도래 기금 존치여부 검토 : '22.4월 내 ○ '23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조정 : '22. 8월~9월
<p>52. 집행부는 시의회와 소통이 없으면서도 예산편성 등과 관련하여 소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납득이 될 만한 노력이 필요해 보임 (예산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편성과정에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한 의장단·상임위원장단 현안설명회('21.10.25.), 예결위 업무보고회('21.10.27.~10.28.) ○ 향후 '23년 예산 편성 시에도 시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원활한 예산심의회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예산편성 : '22.7월~12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53. 집행부는 요구자료 제출 시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제출여부 등의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바람 (조직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시, 시에서 보유한 자료의 내용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하였음 ○ ‘최근 3년간 부정·비리 적발현황’ 자료는 부정·비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감사위원회로부터 ‘19년~’21.9월말까지 적발현황과 조치결과를 공문으로 받아 제출한 것임 ○ ‘최근 3년 민간위탁 회계감사 부적정 사례적발 및 조치내역’, ‘최근 3년 민간위탁 통합회계감사 보고서 사본 및 주요 지적사항’은 외부 회계법인에 의해 실시한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감사의 경우 외부 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시, 감사 유형중 ‘이행감사’를 실시하도록 지침에 규정, 감사 결과 ‘지적사항 없음’은 ‘규정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광의의 회계 부적정 사례를 판단하기는 어려움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구자료 제출시 요구 취지를 적극 반영하여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54. 농수산식품공사 등 현재 공석인 투자출연기관들은 임기를 만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공석 상태인데, 기초실의 역할이 부족해 보임, 행정의 공백이 없도록 개선 바람. (공기업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년 투자·출연기관의 기관장 임명 : 14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 SH, 산업진흥원, 신용보증, 세종, 여성가족, 복지, 문화, 시향, 디자인, 디지털, 120다산콜, 관광, 사회서비스원 ○ 공석 임원 충원절차 진행 : 4곳('22.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연구원, 50플러스재단, 기술연구원, 장학재단(비상임)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장 공석인 서울연구원 등 4곳은 조속히 충원 예정
<p>55.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타 지자체 관련 업무에 대한 판넬을 만들면서까지 국정감사를 받는 것은 부적절해 보임. (도시활성화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경기도 행안위 국감 모니터링 과정에서 서울시 국감에서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였음. ○ 우리시에서는 급격히 이슈화된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여 시민의 의구심을 풀어줄 필요가 있었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56. 또한 국감을 대비해서 요구자료 목록에도 없었던 내용을 판넬로까지 만들었다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훼손할 수 있음. 유감임. (도시활성화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선 경기도 국정감사 모니터링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대장동 사례 관련하여 서울시 도시개발사업과 비교·질의를 할 것으로 예상, 답변을 준비한 것이며, 실제 국감 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질의가 있었음. ○ 국감쟁점 회의를 하면서 복잡한 사업구조를 판넬 없이 쉽게 설명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효과적인 답변과 성실한 수감을 위한 일반적인 업무수행 과정이었음 ○ 시민들께 서울시와 경기도의 도시개발사업의 차이를 명확하게 비교·설명 드려 객관적이고 올바른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것임
<p>57. 노동문제, 사회적경제문제, 마을공동체는 기존에 사업을 운영해 오다가 시장이 바뀌자마자 갑자기 죄인 취급을 당하고 있음, 지양해 주기 바람. (평가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간 시의회, 언론 등에 나타난 대내외 의견을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 ○ 평가기준 일관성 유지, 객관성 확보 강화 등을 위해 업무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평가기본계획' 수립 중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평가기본계획 수립 : '22.2월 ○ '평가기본계획' 상 목적과 내용에 맞게 평가 추진 : 연중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58. 열심히 뛰었던 사람들이 공로를 인정받지 못할지언정 고발 조치 당하였음. 지난 5년여 간 같이 일을 했던 공무원들도 책임감을 느껴야 함. (평가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사업 중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사회주택의 경우 감사진행('21.11월) - 특히,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의 경우 주관부서는 지도·감독책임을 물어 기관경고 조치('21.12월)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진행에 있어 책임행정이 구현 가능하도록 평가진행시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 진행
<p>59. 학술용역관리 시스템 관련 작년 행감에는 한건도 지적받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한 것이 없는 것 같음. (시정연구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용역관리 시스템 시스템 기능 개선 : '21. 9월 - 사용자 및 관리자 기능 및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시 분청 및 사업소 ⇒ (추가) 시 산하 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 용역 최종 결과물 공개 절차 간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옆에 최종결과물 시홈페이지 공개 등록버튼 추가 - 기능 애로사항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용역 심의 후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수정되도록 개선 ▷ 정책연구 비공개로 시작하였으나 진행과정에서 공개 전환 되도록 개선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기능 관련 개선방안 마련 실무회의 개최 : 수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60. '20년 행감 지적사항으로 중복, 공개되지 않는 부분, 심의과정에서의 문제 총 3가지 문제였는데 개선된 것이 없음. (시정연구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용역 운영 종합 개선계획' 수립 : '2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중복용역 방지를 위한 사전검증 시스템 마련 ('20.12월 표절검사시스템 라이선스 도입 완료) -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학술용역시스템 개선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학술용역 운영지침 개정 : '22.2월 ○ '22년 제1차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개최 : '22.3월(예정)
<p>61. '21년 추경에서 신용보증재단에 사후 안심자금 출연 관련 출연금을 줄 때는 상임위에 의결을 받기로 했는데 사전 작업이 없이 진행됨. 그 과정이 급박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상의도 없었음. 시정 바람. (예산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부서(소상공인정책담당관)에서 추가 출연관련 상임위원장 및 일부 위원에 진행 경위 등 별도 보고함('21.10.27.~10.28.)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 보고내용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2차 추경(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 기획경제위('21.8.30.) 안건에 미포함 ▶ '국민지원금' 예산 감액분에 대해 해당 상임위 논의('21.8.31.) ▶ 예산 감액분에 대하여 '4무 안심금융' 추가 공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결위 의결('21.9.1.) 및 본회의 안건처리('21.9.2.) </div>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추가 출연 진행시 상임위 의결 등 철저 진행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62. 금번 개방형 대변인 채용 관련, 통상적인 규칙 개정을 한 이후로 인사위를 여는 등의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됨, 시정 바람. (인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지침」(행안부 예규)에 따르면, 당해 개방형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예상될 경우에는 결원 발생과 동시에 임용할 수 있도록 미리 임용절차에 들어가도록 정하고 있음 ○ 관련 규정의 취지는 결원에 따른 공석을 최소화해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과거부터 개방형직위 채용절차 및 기구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병행하여 진행해 왔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도 개방형직위 채용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음
<p>63. 마을변호사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충분한 상담시간의 확보 등 합리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바람. (법률지원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변호사 상담시간은 30분으로 법무부 등 타기관에서 운영 중인 법률상담시간에 비해 충분한 상담시간을 확보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 법률상담터: 15분, 대한법률구조공단: 20분 ○ 또한, 한 번의 상담으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의 경우 재예약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시민이 원하는 만큼 여러 명의 변호사에게 추가로 상담을 받은 후 종합하여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중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 모니터링으로 상담 관리하여 시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64. ①市の 일방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 ②종합성과평가와 특정감사 중복 시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특정감사를 다음해로 유예, 고용승계 80% 이상 보장에 대해 단서조항을 넣어 노동자 보호조항을 무력화한다는 행정사무감사 제보사항이 있었음. (조직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p>① 서울시의 일방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침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① 수탁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간위탁 거버넌스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②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민간위탁 운영평가 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 '21.10월 지침 개정시, 개정에 필요한 위 2가지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침 개정안 마련('21.8월)→주요부서 의견수렴('21.8.20)→민간위탁 거버넌스 개최('21.9.16)→운영평가위원회 개최('21.9.23)→지침 개정안 및 배포('21.10.13)→실무자 교육('21.10.14/ 2회) <p>② 특정감사 유예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성과평가는 “주로 사업과 관련한 성과 지표의 달성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며, ‘감사’는 사무의 방만 운영 및 위법성 등을 판단하는 것임 ○ 따라서 종합성과평가에서 평균이상의 점수를 받았다고 하여 수탁기관 운영에 있어서 관련 규정 미 준수 등 불법·부당한 사례가 없다고는 볼 수 없음 ○ 이러한 종합성과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고 감사가 필요한 경우 적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관리 지침에 “특정감사 유예” 규정에 대한 단서를 신설함 <p>③ 고용승계 단서 조항 마련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특별한 사정’에 대한 예시를 명시한 것은 불분명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갈등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임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민간위탁 관리 지침 중 “고용승계 관련” 개정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승계의 예외 사항인 “특별한 사정”에 대한 예시(정부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사항, 사무종료, 운영방식 전환 등) 제시 - 고용승계 범위의 조정이 가능한 경우(사무의 일부 폐지 및 축소 등으로 인한 필요인력 감소, 수탁기관 종사인원이 극소수 등) 및 승계범위도 예시(25%~80%)로 제시 </div>

건의사항

건의사항	조치결과
<p>1. 행정안전부의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 경영평가지 각 기관의 실적 개선이나 기관의 규모를 고려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조속히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체계의 개선을 요구하기 바람. (공기업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검토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에 경영평가 체계 개선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개선 의견조회시 기관 실적개선사항· 규모를 고려한 평가가 진행되도록 의견 제출 검토중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평가 개선 의견조회(행정안전부)시 평가체계 개선 요청 : '22. 6월~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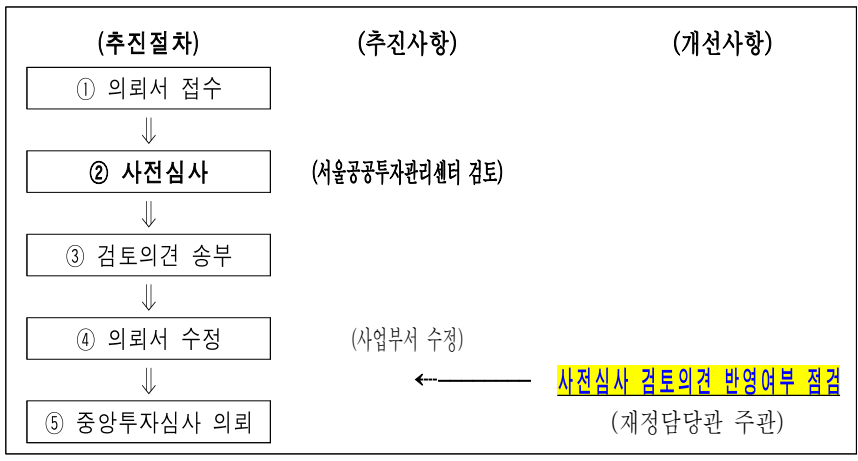
건의사항	조치결과
------	------

2. 사전심사
 심의제도에도 불구하고
 중앙투자심사에서 서울시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 의견이 빈번하게
 내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 제고 방안도 함께 생각하고
 강구해야 함.
 (재정담당관)

추진상황 : 추진중

추진내용

- 중앙투자심사 추진절차 개선
 - 사전심사 검토의견 반영여부 점검 절차 추가로 통과율 증대
 - ※ 현재는 사업부서에서 사전심사 검토의견 자율적용



【 최근 4년 중앙투자심사 실적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심사건수	33건	58건	46건	49건
통과율	84.8%	87.9%	67.4%	65.3%

향후계획

- 추진절차 개선
 - 최종 중앙투자심사 의뢰 전 사전심사 검토의견 반영여부 점검 절차 추가 시행
 - ※ 당초 계획한 사업성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전심사 검토의견이 최대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조율
 - 2022년 3월 제2차 중앙투자의회서 접수부터 재정담당관 주관으로 시행

건의사항	조치결과
<p>3. 서울 시민들이 인용재결을 받았을 때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한 사실들을 시민들이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음. 홍보에 대한 고민 필요 (법무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행정심판 비용지원 제도 안내 홍보 리플릿 (23,500부) 제작·배포 완료('21.12월말 기준) - 사회복지시설 235개소 4,800부, 시금고 은행 및 시 지원시설 775개소 8,600부, 자치구 민원실 25개소 및 동 주민센터 425개소 9,500부, 시 민원실 등 600부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시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방안 발굴
<p>4. 재결기간이 길어지면 민원인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기에 처리절차와 기간을 간소화 및 대폭단축해서 시민들의 손실 최소화를 위해 노력바람. (법무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인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심판 재결기간 단축(전년대비 30일 감소) ※ 3년간 평균재결기간 : 110일('19) → 104일('20) → 74일('21) ○ 특히,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생사건(일반음식점, 운수과징금 등)의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재결(평균 58일)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시민 권익구제를 위하여 재결기간 단축 지속 노력

건의사항	조치결과
<p>5. 규제개혁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어떤 점이 입장차가 있는지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함. (법무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검토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황 : 최근 3년('19~'21년) 건의과제 370건 중 100건 수용(수용률 3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완료 45건, 일부개선 6건, 개선예정 49건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수용 과제 검토 후 재건의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부처의 미수용 사유를 검토하여 건의안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대상 법령 변경, 법령개정 효과 분석 등 분석 - 시·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하여 타 지자체와 공동 건의
<p>6. 올해 중앙정부 건의과제 113건 중 미회신이 99건 임.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자영업자나 국민들의 삶을 돌보는 규제개혁이나 여러 개의 미회신 되는 지점들을 잘 살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무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건의과제 124건 중 74건 미회신, 회신율 40.3% - 2021년 10월 기준 회신율은 12.4% ○ 추진내용: 미회신된 과제는 소관부처에 재건의하여 회신 독려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미회신 과제는 국무조정실 등 규제 총괄부처를 통해 건의 추진('22.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의내용 반영 여부 확인 및 현행화 후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건의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개혁신문고 : 국무조정실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건의창구로, 소관부처에 접수된 날부터 2주 이내에 답변

건의사항	조치결과
<p>7. 특별회계 관련해서 작년 행감에도 특정한 목적사업 관리를 위한 개선사항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꼭 바쁜 시기인 10월 달에 분석이나 개선방향을 마련하고 있음. 시기 조정 필요 (예산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토방향) 특별회계별 수요와 필요성, 중복여부 등 12개 특별회계 전수조사 후 존치여부 및 통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예정 - 사업목적 달성 여부 및 설치 목적 유사 여부 검토, 수지 분석 등을 통해 법정 설치 특별회계는 운영체계 개선 도모, 조례 설치 특별회계는 통·폐합 등 검토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예산안 편성 시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22년 상반기 중 정비 추진
<p>8. 마을변호사가 불친절·불성실한 상담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법률지원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변호사 대상 친절·성실한 상담 지속 요청 및 우수 변호사에 대한 시장 표창을 통한 동기 부여 - 친절한 상담 요청 공문 발송 완료('21.9.29.) - '21년 마을변호사 유공 표창 30명 수여 ○ 불친절·불성실 민원 반복 발생 마을변호사 해촉 등 검토 ○ 매년 실시 중인 마을변호사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제도 점검 및 개선사항 발굴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마을변호사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22.7월 예정) ○ 2022년 마을변호사 유공 표창('22.12월 예정)

건의사항	조치결과
<p>9. 법률상담 예약 시 전문분야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 매뉴얼 마련, 시스템 보완할 필요가 있음 (법률지원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검토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변호사 온라인 예약시스템에 변호사의 전문분야를 명시하여 신청자가 상담신청 단계에서 미리 확인 후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 - 우선 각 동 주민센터 상담예약 화면의 공지사항란을 활용하고, 추후 전산 시스템 개발을 통해 보완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협조 요청
<p>10. 향후 서울시의 국제경쟁력 평가 순위를 참고하거나 인용할 때, 특정 지수만 활용하거나 자칫 어떤 의도를 가지고 비교 평가하는 것처럼 해석되는 일이 없도록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경쟁력 지수를 다양하게 활용,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림 (시정연구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경쟁력 측정 기관별 기준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기관의 평가지수에 매몰되지 않도록 주요 국제평가지수를 전반적으로 검토·모니터링하여 정책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국제 경쟁력 평가지수 모니터링 지속

건의사항	조치결과
<p>11. 서울시의 자치구에 대한 시비보조금 축소로 자치구의 재정 부담 발생 예상됨. 시 사업과 자치구 사업에 대한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예산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자치구 재정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주요 보조사업에 대한 시·자치구 재정분담을 합리적 수준으로 재조정하기 위해 보조금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한 시비보조율 조정을 추진 중임 - 시는 그간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16.1.), 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자치구 복지·문화시설 등 시비지원기준 개선('19.9.) 등 자치구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현재 모든 자치구는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 초과함 - 또한, 지난 10년간('11~'21) 시 전체 재정규모에서 자치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자체재원 중 재산세 징수 증가 및 시·중앙정부의 법정 의무경비 지원액 증가로 세입여건이 개선되고 있음 ○ 사무귀속 주체 등을 고려, 자치구 사무는 자치구가 재정을 부담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자체 추진토록 하고, 시 지원이 필요한 시 사무는 유사사업 통폐합을 통해 집중 지원하여 재원집행의 효율성과 정책 효과성을 높이겠음 ○ 또한 보조금 조례 개정 후, 개별사업별 시비보조율 규정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 시, 시·자치구 재정상황 및 행정여건 등을 고려, 탄력적으로 보조율을 조정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 '22.2월~3월

건의사항	조치결과
<p>12. 주민자치회, 주민자치단 등이 향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예산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9월 현재 22개 자치구 236개동(55.4%)이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추진 중임. - 1단계('17~) 4개구 61개동('17년 26개동, '19년 20개동, '20년 15개동) - 2단계('18~) 11개구 : 140개동('18년 55개동, '20년 85개동) - 3단계('19~) 7개구 : 35개동('19년 35개동) ※ 4단계('20년) 추진예정이었던 3개구(중구·서초·강남)는 구의회 조례 제정 미통과로 미추진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회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용역」('22년 상반기, 서울연구원 기본과제) 추진 및 사업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지원방향 검토 예정임

건의사항	조치결과
<p>13. 서울시의 인구정책을 추진 시 인구 유출입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수립·추진하기 바람. (시정연구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변화대응 전문가 TF’ 구성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인구, 미래, 경제, 복지 등 정책 분야별 전문가(9명) - (역할) 미래인구변화에 대한 서울시의 총괄적 입장과 대응 정책의 범위와 방향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 ○ 국가 및 타 지자체 정책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균형적인 인구변화대응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변화대응 전문가TF 운영 : '22년 상반기
<p>14. 국가균형발전과 서울의 장기적 미래비전, 도시 인구정책으로 인한 도시문제에 대해 근본적이고 깊이 있는 성찰을 토대로 인구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바람. (시정연구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변화대응 전문가 TF’ 구성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인구, 미래, 경제, 복지 등 정책 분야별 전문가(9명) - (역할) 미래인구변화에 대한 서울시의 총괄적 입장과 대응 정책의 범위와 방향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도시문제의 근본적 원인분석 및 시정전반의 인구변화 대응 방향 및 전략을 수립하겠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변화대응 전문가TF 운영 : '22년 상반기

기 타 사 항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1. 코로나19이전, 코로나 상황, 코로나 19 이후 변화된 사업 현황 (기획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2. '20~'21년 위원회 운영현황 (참석자, 회의수당, 대면회의여부) (기획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3. 서울시 자치구별, 기관별 코로나19 집단발생 현황 및 서울시 대응 조치 (보건의료정책과)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4. '21년 학술용역 심의자료 (시정연구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5. 최근 5년간 사회주택, 노들섬, 사회적경제센터 처럼 평가를 한 내역 (평가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p>6. 오세훈시장 취임 이후 수시평가 자료 (평가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p> <p>○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p>
<p>7. 마을변호사, 법무사 상 담실적(건수, 내용, 조 치사항) (법률지원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p> <p>○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p>
<p>8. 법률상담 온라인시스템 2달간 실적 (법률지원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p> <p>○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p>
<p>9. 최근 3년간 상생사회 성과 (도시농업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p> <p>○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p>
<p>10. 온라인 학습지원 진행 상황 (대외협력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p> <p>○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p>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p>11. 노동이사가 제기한 안전제출 및 반영여부 현황 (공기업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p> <p>○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p>
<p>12.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공기업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p> <p>○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p>
<p>13. 우수정책 해외진출 현황 (도시브랜드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p> <p>○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p>
<p>14. 생활 맞춤형 soc 진행 현황 (균형발전정책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p> <p>○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p>
<p>15. '21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운영평가위원회 및 거버넌스 개최 세부내역 (조직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p> <p>○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p>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p>16. 세출사업 구조조정 세 부 내역 (예산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p> <p>○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p>
<p>17. '21년 민간위탁 용역 (종합성과평가) 내역 등 관련자료 (조직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p> <p>○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p>
<p>18. 국정감사 제출자료 4건 (오영훈, 이종배, 박성 민, 이현승 국회의원에 게 제출한 자료) (기획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p> <p>○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p>
<p>19. 동대문 DDP '08년부 터 현재까지 부서별 총 예산 현황 (예산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p> <p>○ 자료 제출 완료 (2021. 12. 2.)</p>
<p>20. 대변인 임명 후 처음 낸 보도자료 및 대변인 임명시 조례(규칙 개정 없이 채용절차를 진행 해도 된다는 행안부 근 거) (인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p> <p>○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3.)</p>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p>21. 시정연구 논문 - 최근3년간 수상자 논문 제출 - 최근3년간 연도별 추진계획(방침서), 결과보고 - 관련 수상논문을 통한 법령 및 제도, 사무관리 등의 - 서울시정 개선현황 (시정연구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p>
<p>22. 민간위탁 운영개선 지침 상세내용 (고용승계 관련 내용 등) (조직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p>
<p>23. 서울비전 2030 사업 구체적 내용 (기획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p>
<p>24. 평가담당관 소관 평가의 지표 및 기준과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에 평가지표 등이 달라진 사항이 있다면 설명 (평가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p>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25. 오세훈 시장 취임 후 감사청구 목록 현황, 감사완료 결과보고서 (감사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26.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 간위탁 관련 평가보고 서 최초 문서 생성일자 (평가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12.)
27. 시장요청평가사항 내역 (평가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28. 서울시 일상회복추진단 민간자문단 위원리스트 (성명, 소속, 주요경력) (기획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29.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 체 합동평가 서울시 성 적 및 인센티브 내역 (평가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30. 학술용역 표절검사시스템 도입개요 및 표절논란 사례 (시정연구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31. 최근 인구변화관련 서울시에서 실시한 연구 및 토론회 현황 (시정연구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32. 마을변호사 만족도 조사 세부내역 및 결과 (법률지원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33. 주요사업, 사전계약심사 세부내용 (계약심사과)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34. 대정부 건의사항 중 국무조정실 시도지사 협의회 등 다른 경로로 제출한 의견 (법무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35. 최근 3년간 행정심판 중 재결기간 경과한 사 건현황과 사유 (법무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36. 최근 3년 행정심판 비 용지원 내역 (법무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37. 서울지역 온라인학습 지원계획서 (대외협력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38. 투출기관 별 직원 복지 세부내역 (공기업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39. 최근 3년간 지속가능발 전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 목록 (평가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40. 집행부진사업 1,270억, 중복사업 782억 목록 (예산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41. 최근 3년간 국선대리인 신청 및 지원내역 (법무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42. 태양광사업 관련 감사원에서 발표한 조사결과 중 민간위탁으로 에너지드림센터로 운영중인데 민간위탁 관련 자료 및 서울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사무 관련 일체 자료 (녹색에너지과)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3.)
43. 민간위탁 유형별 현황 및 표준협약서 사용여부(미사용일 경우 사유 포함) (조직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44. '21년 국정감사에서 요구된 자료목록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 (기획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45. 오세훈 시장 공약사항 및 이행계획, 추진실적 (기획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46. 투출기관 이사회 등 직에 따른 내부위원 참석현황 (공기업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47. 신임시장 당선 이후 민선7기 사업 중 중단되거나 변경된 공약사항 (기획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48.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민간위탁 관련 조치사항(예산, 전담인력 배치) (조직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p>49. 종합성과평가결과 하위 점을 받은 경우, 이를 수탁기관에 통보한 내역 (조직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p> <p>○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p>
<p>50. 투출기관 규정정비 현황 (공기업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p> <p>○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p>
<p>51. 노동환경 개선 컨설팅 요약본(또는 원본) 및 조치사항 (조직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p> <p>○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p>
<p>52. 서울시 바로세우기 관련 언론보도 해명자료 (재정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p> <p>○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p>
<p>53. 최근 3년간 예산편성 운영기준 관련하여 해당부서에 배포되었던 책자 발행일, 배포일 (예산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p> <p>○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15.)</p>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p>54. 민간위탁 사무 중 취소, 정지, 시정요구 등을 통해 예산삭감된 위탁사무 중 조례상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조정하였던 내용 (조직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p> <p>○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3.)</p>
<p>55. 코로나19 치료병상 확보 내용 중 중증병상 확보 현황 (병원별) / 추가확보내역 / 감염병 병상별 284개 중 자체 병상, 행정명령상 병상 구분 (코로나19대응지원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p> <p>○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p>
<p>56.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21.2월,10월) 변경내용 및 근거 (조직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p> <p>○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p>
<p>57. 수탁기관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대책('19.5.) 추진현황, 이후 추가대책 유무 (조직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p> <p>○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p>
<p>58. 규모가 큰 12개 특별회계 전수조사 진행 현황 (예산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p> <p>○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p>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59. 최근 5년간('17~'21) 특별회계 규모, 증가율, 서울시 전체예산 대비 특별회계 비율(본예산 기준) (예산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60. 최근 3년간('19~'21) 특별회계 계정별 지방채 규모, 타회계 전입금 규모 (예산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61. 2개 이상 실국에 편성된 특별회계현황 (예산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62. 최근 5년간('17~'21) 특별회계 집행률, 잔액률, 이월율(결산기준) (예산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63. 투출기관 장애인 법정 의무 고용관련 최신 현황 (공기업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p>64. 최근 5년간 종합성과평가 실시를 이유로 특정 감사 유예된 사례 (조직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p> <p>○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p>
<p>65. 장애인 고용 후퇴 주요 사유 및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현재까지의 노력과 향후 계획 (공기업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p> <p>○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p>
<p>66. 최근 5년간 기금 신규 사업 및 폐지사업 내역 (재정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p> <p>○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p>
<p>67. 서울시 바로세우기 관련 1조원 집행내역, 점검내역(분야별 표기) (조직담당관, 재정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p> <p>○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p>
<p>68. 2030 시민위원명단 (기획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p> <p>○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p>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69. 15년간 국제기구 도시 경쟁력 모니터링 및 서울시 입장 (보도자료) (시정연구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70. 투출기관 노동이사 근무부서 (공기업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71. 투자출연기관 규정정비 관련 기관별 추진실적 (공기업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72. 10년간 민간위탁 받은 단체 종합평가서 및 지원내역 (조직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11.)
73. 중간지원조직 목록 (조직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2.)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p>74. 서울시 본청에서 운영 중인 법률상담서비스 현황 (법률지원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p> <p>○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5.)</p>
<p>75. 자치구별 경상보조금 내용 중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한 내용 (자치행정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p> <p>○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15.)</p>
<p>76. 자치구별 경상보조금 내용 중 동단위 계획형 지원사업/자치구마을생태계사업에 대한 내용 상세히 제출 (지역공동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p> <p>○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15.)</p>
<p>77. 최근 5년간 SH공사에서 공급한 주택 중 현재 공사 진행사업 및 계획(전월세여부, 예산, 세대수, 전월세 구분하여 자치구별 제출) (서울주택도시공사)</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p> <p>○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16.)</p>